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

박 정 수

2023. 12.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

박 정 수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fis.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200 ✉ mymajesty@fis.kr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정상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20년부터 100조 원을 초과

-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다양한 관리제도를 운영 중
 -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 계속 사업에 대한 연장평가 등은 재정성과관리에 포함된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에 해당
 -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17년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을 개통해 운영 중
- 국고보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체계와 시스템은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 연계나 활용이 제약
- 국가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플러스는 국가 재정 전반의 재정성과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내역사업 관리, 중복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이나라도움 운영
- 연장평가, 신규사업 심사를 위한 근거정보는 이나라도움에 저장되어 있으나, 연계가 되지 않아 평가 근거자료는 수기로만 받고 자료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있는 등 한계

□ 국고보조사업을 신규사업 편성에서 시작해 일몰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생성, 축적되는 정보를 일관된 체계에 맞게 저장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는 정보, 수기로 관리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관리정보 활용 가능성, 추가 전산화 정보 범위 도출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일자리, 재난안전 등 다부처사업 관리에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사점 제시

2. 해외 사례 검토

□ 가장 최근에 보조사업 관련하여 전산 인프라를 일신한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 미국의 보조금은 예산 편성, 사업 관리,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관리, 성과관리가 모두 분산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분산되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 공개 역시 일원화하기 위해 노력
- 영국은 정부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 GGIS(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을 2017년 개통해 운영 중이며, 이 시스템은 보조금 누수 관리, 부정수급 탐지 등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 정보 공개와 정보 활용 차원으로 확대

□ 미국은 최근 국고보조사업 관련 인프라를 일신하고, 성과 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

- 미국 국고보조사업 전산 통합은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해 18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통합사업환경(IAE: Integrated Award Environment) 하에서 조달·보조통합시스템 SAM(System for Award Management)과 성과시스템 CPARS(Contractor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ing System)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이며, 2014년 보조금 관련 지침 6개를 표준화하여 단일화
- 또한, 통합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USASpending 외에도 성과관리 정보 공개를 위한 performance.gov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집약 공개하기 위해 2021년 evaluation.gov를 오픈

□ 영국도 GGIS 시스템 개통과 연계해 제도개선과 정보 공개 강화를 병행

- 2017년 정부보조금정보시스템 GGIS(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을 개통하면서 대대적으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절차가 전산화, 표준화하고, 2016년 일반보조금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General Grants)을 제정
- 2021년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성과관리와 사후평가를 성과점검, 적정성 평가, 심층 평가 등으로 통일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 보조금 평가 보고서를 uk.gov에 통합공개하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360giving에 공개하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

3.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 성과 정보 관리 현황과 한계

- 우리나라의 보조사업 관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이 개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연장평가는 2010년 도입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제도는 2017년부터 실시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는 성과지표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정보임
 -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에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정보는 이나라도움에서 저장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분석 결과, 전산관리와 공개 강화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정보 관리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
 -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관리에 있어서는, 단순히 달성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의 상향, 신규 지표의 설정 여부, 우선순위 여부 등이 관리, 공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음
 - 연장평가 역시 여러 지표 중 사실상 효과성, 실집행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세부 점수가 아닌 판정 등급만 관리
 - 또한 dBrain+와 이나라도움이 분리 운영되어, 지표와 평가 결과가 상호 활용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의 한계 노출
 - 정보 공개 역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국고보조금공개시스템 이나라도움이 분리되어 있고, 알기 쉽게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

4. 개선 방향

- 그간의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의 개선의 효과를 분석하고,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화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

-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업무 절차를 확립해야 함. 이를 위해 dBrain+의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하위로 국고보조금 통합DB를 구축, 이나라도움 데이터를 연계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DB를 보조금의 관리 순기, 사업별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속성정보 등을 확충해 개선해야 함
-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의 신규편성, 연장, 확대, 통합, 폐지 전 과정에 성과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해야,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표 1〉 비교대상 3국의 보조금 관리제도와 시스템 비교

		미국	영국	대한민국
규모1)		8.7조 달러 (총지출 대비 61.7%)	4,164억 파운드 (총지출 대비 39.3%)	102.3조원 (총지출 대비 16.0%)
제 도	법령/ 관리 지침	OMB A-11 예산안 편성준비지침 OMB Uniform Guidance on Grants	Gov't Functional Standard:Grants Guidance for Grants Grants Pipeline Control Framework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사업 목록	Assistance Listing	360giving list	이나라도움 내역사업 목록
	평가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평가 보조사업자성과평가	성과점검, 적정성평가 심층평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조사업성과지표관리
전 산 관 리	시스템	SAM CPAR	GGIS	이나라도움
	개요	사업자 등록 및 관리 공모사업등록	공모사업 성과관리	내역사업 등록, 공모사업 관리
	주사 용자	사업자/관리 자 사업자/관리 자	사업자/관리자	사업자/관리자
	공개	보조사업 목록: SAM.gov/grants.gov 재정정보: USASpending.gov 성과정보: Performance.gov 평가정보: Evaluation.gov	평가정보 및 성과정보: uk.gov 보조사업 목록: 360giving	성과정보 및 평가정보: 열린재정 보조사업 목록 및 평가정보: 이나라도움

주 1) 각국 2023 회계연도 기준

자료: 각국 지침, 공개 홈페이지 자료 기준으로 저자 작성

목 차

I. 서론	1
II. 주요국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3
1. 미국	4
가. 미국의 보조사업 관리	4
나. 보조사업 성과관리와 지원 시스템	6
다. 미국의 보조사업 성과정보공개	14
2. 영국	21
가. 영국의 보조사업 관리	21
나. 보조사업 성과관리 지원시스템	25
다. 영국의 보조사업 성과정보공개	32
3. 주요국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시사점	33
III. 국내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36
1. 우리나라의 보조사업 관리	36
2. 보조사업 성과관리 제도와 지원시스템	40
3. 보조사업 성과정보공개	53
4.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한계	55
IV.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방향	60
1. 데이터 관리 및 업무 절차 확립	60
2. 데이터베이스 개선	62
3.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의 활용과 공개 확대	63

목 차

V. 결론 및 시사점	66
〈참고문헌〉	69

표 목차

〈표 II-1〉 미국의 보조금 지출 규모와 추이	4
〈표 II-2〉 부시 행정부 IAE 통합 대상 시스템	7
〈표 II-3〉 오바마 정부 IAE 통합대상 시스템	8
〈표 II-4〉 보조금 관련 시스템 별 주요 기능	10
〈표 II-5〉 미국 SAMS 시스템 현황	12
〈표 II-6〉 CPARS 주요 통계(2022년 기준, 단위: 건)	12
〈표 II-7〉 영국 재정통계 상 보조금 추이	22
〈표 II-8〉 GGIS의 사업정보 데이터 필드 구성	31
〈표 III-1〉 국고보조사업 예산 추이	36
〈표 III-2〉 국고보조사업 세목별 예산 추이	37
〈표 III-3〉 역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관련 주요 내용	38
〈표 III-4〉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기준 성과지표 설정 추이	40
〈표 III-5〉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추이	40
〈표 III-6〉 연도별,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달성 추이	42
〈표 III-7〉 국고보조사업 사업별 지표수 설정 추이	43
〈표 III-8〉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 추이	45
〈표 III-9〉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판정결과 추이	46
〈표 III-10〉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타당성 점수 추이	47
〈표 III-1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점수 추이	48
〈표 III-1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사회적가치 실현 점수 추이	48
〈표 III-13〉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적절성 점수 추이	49
〈표 III-14〉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부정수급 관리 적절성 점수 추이	50
〈표 III-1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자체 사업관리 노력 점수 추이	50
〈표 III-1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수 추이	51
〈표 III-1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실집행 감점 점수 추이	51
〈표 III-18〉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현황	53
〈표 III-19〉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련 법령 및 조항	54
〈표 III-20〉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공개현황	55
〈표 III-21〉 비교대상 3국의 보조금 관리제도와 시스템 비교	56

그림 목차

〈그림 II-1〉 미국의 부처별 보조금 지출 규모('23년 기준, 십억 달러)	5
〈그림 II-2〉 미국 IAE 시스템 통합 개념	10
〈그림 II-3〉 미국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14
〈그림 II-4〉 미국의 재정정보와 실집행 정보의 결합 공개 체계	16
〈그림 II-5〉 Evidence Act 기본 계획	17
〈그림 II-6〉 evaluation.gov 홈페이지	19
〈그림 II-7〉 미국 상무부 전략목표와 학습 아젠다, 연간평가계획 예시	20
〈그림 II-8〉 영국 정부 보조금 규모 추이	24
〈그림 II-9〉 영국 보조금의 정부기능별 배분	25
〈그림 II-10〉 보조금의 관리 절차	26
〈그림 II-11〉 영국 정부 기능 표준 중 분석 기능의 개념	27
〈그림 II-12〉 영국 보조금 집행의 단계와 책임	30
〈그림 II-13〉 360giving이 제공하는 GrantNav 화면	32
〈그림 III-1〉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의 분야별 평균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추이	43
〈그림 III-2〉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체계	54

I. 서론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의 지표, 평가 정보 등 각종 정보의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재정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정상으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초과하였고, 2023년 현재 총지출의 16.0%를 점유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그리고 전산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별첨으로 2017년부터 수록되고 있으며, 전체 국가 재정의 성과관리 틀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결정 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제도를, 그리고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연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표관리, 신규사업 심사, 계속사업 연장평가는 대표적인 국고보조금 관리제도로 전체 국가재정의 성과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하고 중복·부정수급 등을 차단하고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을 개통해 운영해오고 있다.

각종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가 국가 재정 성과관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재정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려면 각종 전산 시스템의 정보 지원이 필수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체계와 시스템은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 연계나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재정시스템은 디브레인플러스와 이나라도움이 있다. 먼저 국가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플러스는 국가 재정 전반의 재정성과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이나라도움시스

템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내역사업 관리, 중복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운영된다.

두 시스템 간의 정보는 아직까지는 연계 활용, 의사결정에의 활용이 아직은 제약이 있다. 먼저 연장평가, 신규사업 심사를 위한 근거정보는 이나라도움에 저장되어 있으나, 연계가 되지 않아 평가 근거자료는 수기로만 받고 자료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있는 등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시범입력 시점(2020) 이전 자료는 전산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시계열 자료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신규사업 편성에서 시작해 일몰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생성, 축적되는 정보를 일관된 체계에 맞게 저장하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의 국고보조 관련 제도 변화와 전산시스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는 정보, 수기로 관리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관리정보 활용 가능성, 추가 전산화 정보 범위 도출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성과관리 자료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관리, 일자리, 재난안전 등 다른 재정관리 제도의 사업관리와 다부처사업 관리에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II. 주요국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국고보조사업은 법적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정의되며, 국고금 교부 과정에서 국세청의 개입 즉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조달, 계약, 인건비 등과 대별된다. 국고보조사업은 또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 등 주체별로, 그리고 경상 보조 또는 자본보조 등 경제 성질별로 다양하다. 이와 같은 보조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에서도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보조사업 관련하여 전산 인프라를 일신한 미국,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의 보조금은 예산 편성, 사업 관리,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관리, 성과관리가 모두 분산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분산되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 공개 역시 일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볼 미국의 사례는 보조사업자 통합관리 환경 구축(Integrated Award Management, 이하 IAE), 그리고 최근의 성과관리 현대화 일환으로 프로그램 심층평가 관련 정보를 한곳에 집대성한 evidence.gov이다.

다음 사례는 영국이다. 2007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 운영 중인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영국도 정부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 GGIS(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을 2017년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조금 누수 관리, 부정수급 탐지 등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 정보공개와 정보 활용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본격 제공되기 시작한 GGIS를 활용한 통계수집 및 제공 기능과 절차, 제공 데이터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미국

가. 미국의 보조사업 관리

미국의 재정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결산 기준으로 2022년 8조 7,781억 달러를 지출해 GDP 대비 34%¹⁾에 도달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팽창한 2021년 보다는 작아진 수준이지만 지난 2월 제출한 대통령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지출은 다시 9조 3,629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미국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²⁾의 총액은 2022년 결산 기준 5조 4,195억 달러로 총지출의 61.7%를 차지했는데, 총지출에서 보조금 및 고정요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66%를 웃돌았지만 대체로 59~61%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것은 민간/해외이전이며,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자본지출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2조 3,352억 달러, 사회보장청 1조 5,183억 달러, 재무부 4,399억 달러, 교육부 2,496억 달러 등의 순이다. 이 네 부처가 전체 보조금의 79.8%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지출의 60%를 보조 및 기여(Grants, subsidies and contributions)로 지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나머지 보조금과 사회보장청, 보훈처 등의 지출은 보험(Insurance claims and indemnities)의 형태로 지출되었다.

〈표 II-1〉 미국의 보조금 지출 규모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조금 및 고정요율	3,518	3,584	3,857	5,921	6,487	5,419	5,190	5,691
	(60.8)	(60.1)	(60.3)	(66.6)	(66.4)	(61.7)	(59.7)	(60.8)
주정부/지방정부 이전	675	697	721	829	1,245	1,193	1,119	1,093
	(11.7)	(11.7)	(11.3)	(9.3)	(12.7)	(13.6)	(12.9)	(11.7)

1) 2022년 미국 GDP 추계 25.46조 달러(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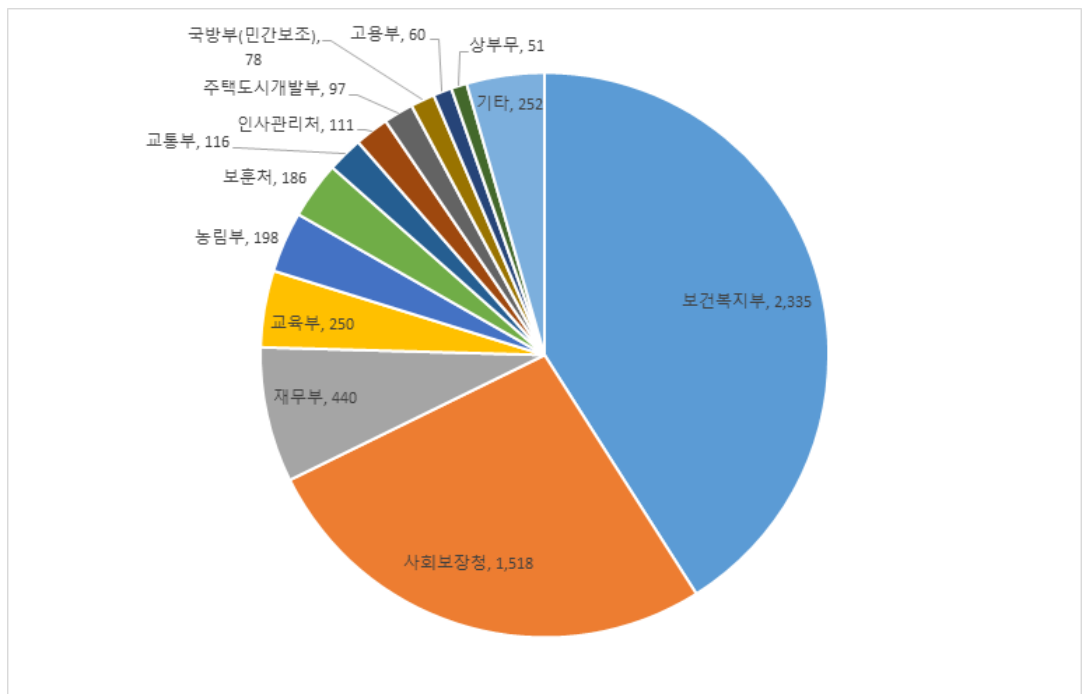
2) 42목 보조금 및 고정요율(Grants and Fixed Charge) 중 보조금 및 부담금(41.0 Grants, subsidies, and contributions), 보험 및 보상금(Insurance claims and indemnities)만 포함. 이자 및 배당금(Interests and dividends), 환불(Refunds), 변제(Reimbursable) 등은 제외.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본지출	79	80	81	85	104	113	123	141
	(1.4)	(1.3)	(1.3)	(1.0)	(1.1)	(1.3)	(1.4)	(1.5)
경상이전	508	526	549	609	690	791	815	760
	(8.8)	(8.8)	(8.6)	(6.8)	(7.1)	(9.0)	(9.4)	(8.1)
기타	87	91	91	135	451	290	181	192
	(1.5)	(1.5)	(1.4)	(1.5)	(4.6)	(3.3)	(2.1)	(2.1)
민간/해외 이전	2,843	2,888	3,135	5,092	5,242	4,226	4,071	4,598
	(49.2)	(48.5)	(49.0)	(57.3)	(53.6)	(48.1)	(46.9)	(49.1)
총지출	5,784	5,960	6,396	8,893	9,776	8,778	8,687	9,36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22년까지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안 기준.

출처) US OMB, President's Budget. Object Class Analysis. 각연도

〈그림 II-1〉 미국의 부처별 보조금 지출 규모('23년 기준. 십억 달러)



출처) US OMB, President's Budget.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청 두 개 부처만 전체 보조금의 64.8%를 지출하며, 미국 연방정부 총지출의 41.2%에 해당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복지지출을 보조금 형태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전달 방법이 보조금 및 부담금, 보험금 및 보상금 형태로 지출됨을 알 수 있다. 주요 사회기반시설 공공투자는 주·지방정부를 통해 지출하며, 그 비중은 총지출 대비 1.5% 수준이었다.

나. 보조사업 성과관리와 지원 시스템

미국은 경제규모와 정부 재정규모만큼이나, 정부의 전산 인프라 구축과 현대화에 큰 공을 들이는 나라이다. 시스템 구성, 내용 등이 2~3년에 한 번씩 크게 변하기도 하는데 보조사업과 관련된 시스템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2002년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여 그간 수행된 각종 정보화 사업을 효율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 IAE도 이 관점에서 당시 부시 행정부의 전자정부 대통령 아젠다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³⁾

IAE는 90년대 이전까지 각 부처와 기관이 각각 수행하던 조달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 과정을 표준화하여 업무의 중복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수행자의 성과정보를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도록,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단일한 창구에서 등록, 관리하고 각종 서식 정보를 표준화하여 사업자의 사업수행, 사업 관리자의 사업 수행을 보다 간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최초 2001년 출범해 2005년까지 IAE 사업의 범주로 포함된 시스템은 9개였는데, 각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았다. 이들 시스템 중 신규로 획득(acquisition)된 것은 4개(WDOL, eSRS, ORCA, FedReg)이었고, 나머지는 타 부처에서 이미 사용하던 것 중 정부 표준으로 인정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가령 CCR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구축하고 사용하던 것을 기능 개선하여 일반행정청에서 인수해 사용한 것이다.

3) 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omb/egov/c-4-7-iae.html

〈표 II-2〉 부시 행정부 IAE 통합 대상 시스템

	정식명칭	주요 기능	IAE포함
CCR	Central Contractor Registration	사업자 등록 및 관리	2003
EPLS	Excluded Parties List System	입찰 탈락 사업자 정보관리	2005
eSRS	Electronic Subcontracting Reporting	소상공인 하청 등 사업수행 정보 등록 및 관리	2005
FBO	Federal Business Opportunities	정부 사업정보 공시	2003
Fed Reg	Federal Agency Regulation	정부 내부거래 추적 관리	2003
FPDS-N G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Next Generation	조달사업 정보 관리	2003
ORCA	Online Representations and Certifications Application	입찰 자격증명 서류 관리	2004
PPIRS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	과거 사업 이력 정보 관리	2003
WDOL	Wage Determinations Online	지역·업종별 표준임금 및 조달사업 인건비 관리	2003
Fed TeDS	Federal Technical Data Solutions	기술 표준, 지도, 건축 등 조달 요청 기술정보 관리	2008

자료: U.S Presidential Initiatives Archives

최초 사업명칭은 Integrated Acquisition Environment였으며, 이는 관리 대상 9개 시스템 중 7개가 연방 조달규제(FAR)에 근거해 운영되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사업을 하기에는 절차가 중복적이며,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2008년에는 이들 시스템의 정보가 호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통합하여 SAM(System for Award Management)을 구축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이들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연방정부 사업자금을 추적하고, 각 부처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정보를 의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IAE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CFDA(Catalogue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를 포함, 사업이 일부 확장되었다. FedTeDS도 당초 해당사항이 아니었으나, 2006년 FBO로 통합되면서 IAE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출범 후 2012년이 지나도 당초 계획 대비 1단계 수준, 즉 위 열거 시스템 중 CCR, EPLS, ORCA 등 3개 정도 시스템만 통합되고,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당초 기획된 시스템이 통합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하

거나, IAE에 타 부처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신규 인수하고, 새로운 법령의 수립으로 신규시스템이 구축되기도 하는 등, IAE 사업 자체가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각종 보조사업(grant/award) 관리 목적으로 확장되면서, 사업명이 Intergrated Award Environment, 즉 통합 사업자 관리로 바뀌었다. 추가 또는 변경되는 시스템 명칭은 아래와 같다.

〈표 II-3〉 오바마 정부 IAE 통합대상 시스템

시스템명	영문명	기능	비고
WDOL	Wage Determinations Online	지역·업종별 표준임금 관리	기존 통합 대상
PPIRS	Past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	과거 사업 이력 정보 관리	
FPDS-NG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Next Generation	조달사업 정보 관리	
FBO	Federal Business Opportunities	정부 사업정보 공시	
eSRS	Electronic Subcontracting Reporting	사업자 사후 정보 등록 및 관리	
CPARS	Contractor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ing System	계약자 성과평가보고시스템	신규
FSRS	FFATA Subaward Reporting System	하부/하청 사업자 관리	
CFDA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보조사업 정보 등록·관리·공시	
FAPIIS	Federal Awardee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ing System	보조사업자 성과평가보고시스템	
SAM	System for Award Management	보조사업자 정보등록·관리	

자료: 조달청(aquisition.gov)

위 목록에는 2002년 당초 통합대상이었던 CCR, ORCS, FedTeDS, EPLS 등 4개 시스템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 시스템은 2012년 기준 SAM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기존의 통합대상 5개 시스템에 더해, 조달사업자 또는 계약사업자(contractor)와 보조사업자(awardee)가 상당 부분 겹침에도 사업자 ID 등이 따로 관리되고 계약 정보, 사업 사후 정보 등이 독립적으로 관리되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동일 사업자가 계약과 보조사업에 있어 복수의 사업을 수주하는 이른바 사업 중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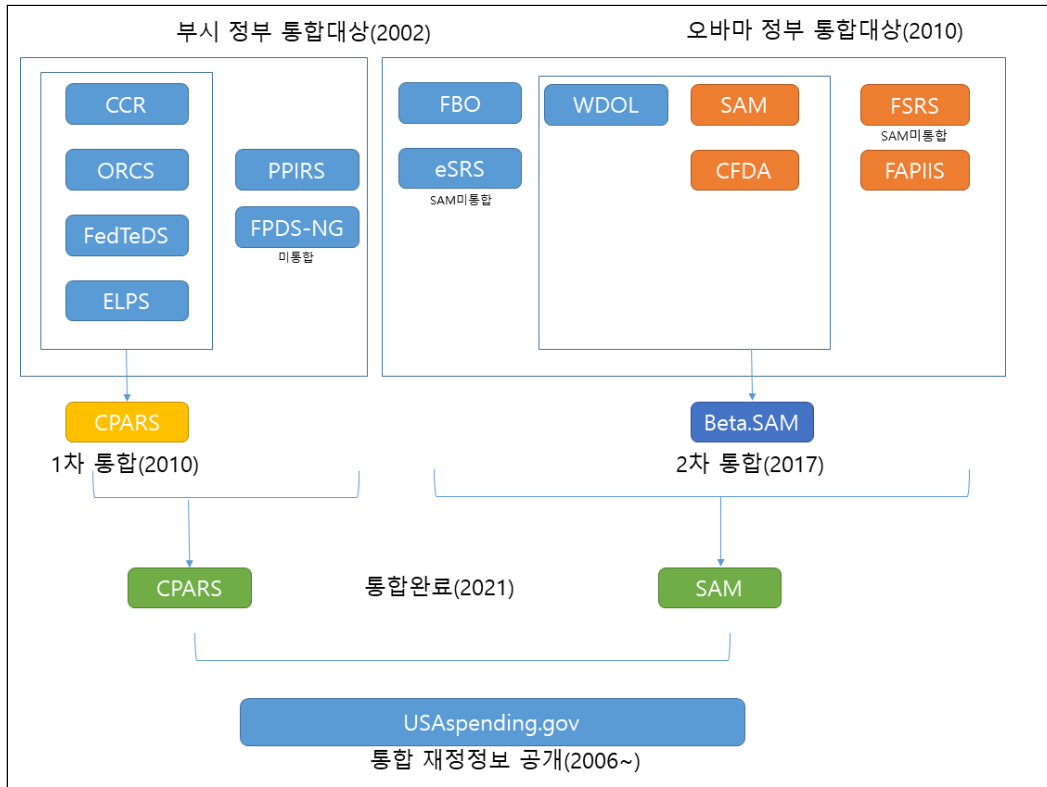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시스템 3개를 더해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통합대상인 FSRs는 2006년 제정된 투명성법(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약칭 Transparency Act)에 정해진 법정 의무 즉 1차 계약자 외에 2차 하청 또는 계약업자의 사업정보를 등록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⁴⁾ 통합 2단계로 CFDA, WDOL, 그리고 FPDS-NG과거 데이터를 통합한 beta.SAM이 2017년 개통하고, 1단계 SAM과 beta.SAM이 합쳐져 2021년 5월 SAM으로 공식 개통하면서 IAE 사업은 마무리되었다.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해 오바마 정부 때까지 약 20여 년 가까이 수행된 IAE 사업은 당초 목적인 조달사업 환경 통합에서 시작해 보조사업 환경 통합까지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는 과거 14개 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행정을 관리하는 일반행정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연방조달국(Federal Acquisition Service)에서 관할하고 있다.⁵⁾ 다만 사후관리, 평가를 위한 기능을 구행하는 eSRS, PPIRS, FSRs는 여전히 통합되지 않았다. CPARS도 IAE 환경에는 포함되지만, 여전히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4) 해당 법에 의한 또 하나의 특이사항은, 모든 연방 자금이 투입된 사업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도록 한 usaspending.gov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

5) 단, 복지부 사업관리국(Program Management Office)이 관할하는 grants.gov는 통합이 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 신청단계에서 SAM.gov는 사업자 등록 및 번호 발급, grants.gov는 사업 신청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자 선정과 통보, 사후관리 등은 모두 SAM.gov에서 수행하고 있다. 보조사업 검색 및 자격 확인 등은 양 시스템 모두에서 가능하지만, 검색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SAM.gov가 더 넓은 편이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한해 성과정보는 CPARS, 보조사업 성과정보는 SAM.gov에서 관리하며, 사업자 선정 정보 등은 모두 usaspending.gov에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II-2〉 미국 IAE 시스템 통합 개념



자료: U.S Presidential Initiatives Archives, 조달청(aquisition.gov) 자료 바탕 저자 작성

이렇게 구축된 IAE는 그 자체로 정부와 외부 사업자의 관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환경이자 작업장이 되고 있다. IAE가 관할하는 사업 영역은 조달 계약 (procurement/contract award), 보조사업(grant award), 융자사업(loan) 등을 포괄한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IAE 하위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표 II-4〉 보조금 관련 시스템 별 주요 기능

시스템명	주요 기능
SAM	사업자 등록, 사업자 번호 관리 계약 정보(광고, 입찰, 낙찰) 관리 임금 정보 관리 연방 보조사업 정보 관리 및 공개 사업자 사후 정보 입력 및 관리

시스템명	주요 기능
CPARS	도급자/사업자 성과정보 관리 (공무원이 평가정보 입력 후, 사업자는 조회만 가능)
eSRS	사업자 사업계획, 하도급 계획 등 사업 중간 정보 입력 및 관리
FSRS	하도급/하위 계약자 정보 입력 및 관리
FPDS	과거 계약 정보 관리(조회만 가능-계약정보 입력기능은 SAM이관)

출처: 미국 각 시스템 홈페이지 참고하여 저자 작성

미국에서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는, 정부 조달사업, 보조사업, 용자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SAM에서 사업자 통합ID(UID)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SAM 또는 외부의 각 부처 보조사업관리시스템(예) grants.gov에서 사업을 검색하고 자신이 적격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적정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eSRS를 통해 사업 수행 과정을 분기별로 보고하면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2단계 이상의 계약 관계가 발생하면 FSRS를 통해 계획과 경과, 사후정보를 입력하며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SAM에서 사후 정보를 입력한다. CPARS에는 SAM, eSRS, FSRS의 사업 수행정보가 집적되며, 사업수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를 평가하게 된다. 사업수행자는 CPARS의 평가결과를 조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정보는 타 부처와 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공개된다. 타 부처/기관 사업담당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자의 과거 이력을 CPARS, SAM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간략하게 SAM과 CPARS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두 사이트 모두 전반적인 보조사업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장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SAM 시스템은 사업자가 미국 연방정부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곳이다. 중복 부정수급으로 인해 배제사업자(exclusion)로 등록되고 조회도 가능하다. 사업자가 등록을 마치면 정식으로 사업실체(entity)로 간주되며, 고유식별번호를 발급받는다. 2023년 현재 28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SAM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2010년대 구SAM시스템 이용자 수에 비하면 42% 늘어난 것이다. 입찰 공고형 사업 외에도 현금성 등 모든 종류의 현물 보조(assistance) 정보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고 사용가능한 정보도 많은 편이다.

〈표 II-5〉 미국 SAMS 시스템 현황

숫자로 보는 SAM.gov	
280만 명 이상의 등록 사용자	2,300개의 보조사업 정보
67만 4천개 이상의 사업실체	월간 2만 4천 건의 공지 또는 사업공고
월간 5만 6천개의 사업실체 신규 또는 갱신	월간 검색 수 350만 건
14만 7천개의 배제사업자 정보	월간 4만 5천 건의 계약 사후정보 생성

자료: SAM.gov(최종검색일: 2023.8.28.)

다음은 CPARS이다. SAM.gov는 사업자의 사후 정산 보고서, 배제사업자 정보만 등록 관리되고 사업자별 평가등급은 CPARS에서 관리한다. 조달, 보조 사업 등 정부 사업의 사업자별 성과정보는 크게 사업기간, 비용관리, 일반관리, 소상공인 하청, 규제 준응, 기타 등 6개 항목에 따라 관리되며, 이에 따라 총점이 매겨진다. CPARS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II-6〉 CPARS 주요 통계(2022년 기준. 단위: 건)

총 건수					
등록		836712	평가 비대상		50460
평가건수					
수행중	1555523	완료	1306964	합계	1462487
1년내 평가주기 도래			49638		
평가자 추천					
사업자 추천		902725	사업자 비추천		14695
평가 등급					
매우 우수	242144	우수	358495	만족	481649
보통	15669	불만족	5275		

자료: cpar.gov(최종검색일: 2023.8.28.) highergov.com. CPARS Ratings and Trends(최종검색일: 2023.8.28.)

물론 SAM 시스템 자체는 보조 사업 외에도 각종 조달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곳으로 국고보조사업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보조 사업, 용자사업, 조달사업 등 사업 종류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국고를 수령하는 경우를 최종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느 사업자가 얼마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중복과 부정은 없는지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다(Landau, 1969; GAO, 2010). 그리고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처 간 또는 공무원

간 업무 중복과 반복이 발생하는 경우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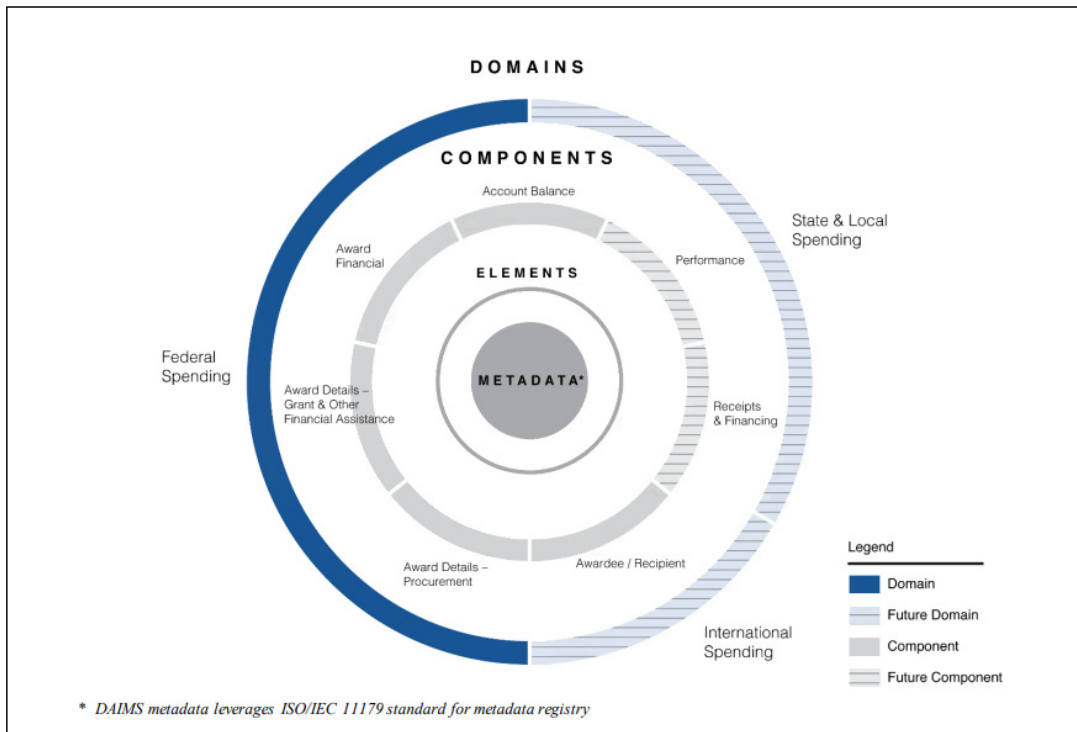
CPARS시스템은 정부 공무원에게만 각 사업자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사업자의 과거 사업 평가이력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CPARS 등으로 사후적으로 배제가 결정되거나 혹은 입찰 과정에서 탈락 또는 배제된 업체의 정보는 SAM에서 Exclusion Listing 형태로 공개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SAM은 사업자, 사업, 계약 건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각 사업 또는 프로그램 별로 정형화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상대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사업별로 공모, 입찰 또는 발주를 할 때 사업자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해당 사업자가 과거에 어떠한 정부사업을 수행했으며 입찰에 탈락한 경우의 이력도 조회가 가능하고, 과거 각 사업별로 정형화된 평가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SAM 시스템에서도 보조사업 목록 및 설명, 사업자 등록정보 등을 모두 조회할 수는 있지만, 사이트의 목적 자체가 사업자 등록과 입찰금액, 사업 집행관리인 만큼 사업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이 사용자 등록을 해야만 조회가 가능한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공개를 위한 사이트는 USASPENDING.gov 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USASPENDING.gov는 별도의 사용자 등록을 위한 절차가 없고, 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종의 사전 정보 공시에 해당하는 IAE 및 SAM 시스템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

다. 미국의 보조사업 성과정보공개

1) USASPENDING.gov

〈그림 II-3〉 미국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출처: U.S. Department of Treas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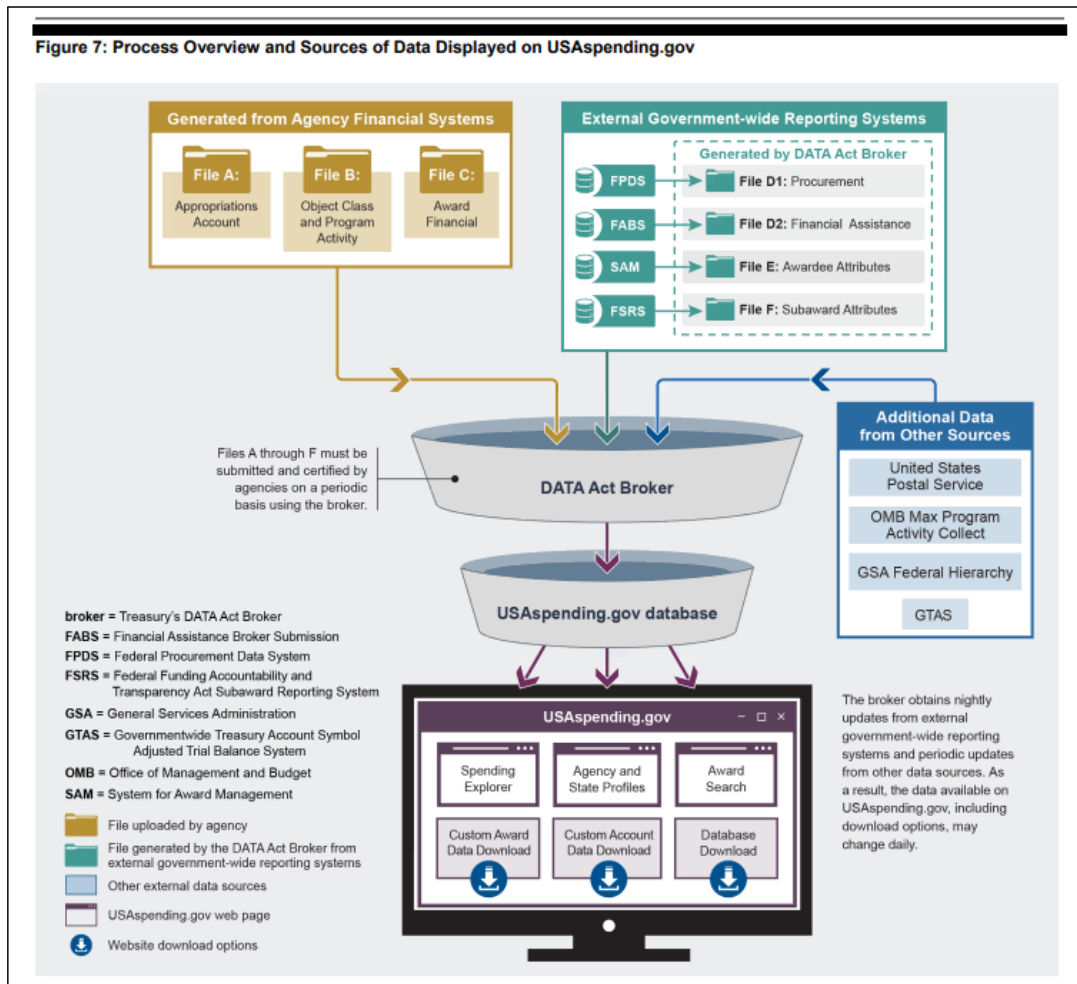
USASPENDING.gov 시스템은 2006년 투명성법(FFATA)이 제정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재정집행의 최종 수령자와 2차 하청 또는 컨소시엄 사업자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IAE 시스템 간의 정보가 유통이 되지 않았고, 공고, 입찰, 낙찰, 집행, 정산 등에 이르는 각 절차에서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데 문제가 있었다. 2012년 DATA Act 제정으로 USASPENDING.gov 구축이 2단계에 들어서고, 2017년 beta.SAM 가동, 2021년 완전 가동 및 사업자 등록번호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계약, 보조, 그리고 용자에 이르러, 거의 정부지출의 전부를 최종 사업자 및 수혜자까지 추적하고 집행 성과를 보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미국 통합재정정보공개는 DATA Act에 근거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현재는 연방정부 수준의 지출이 각 회계(Account), 소관부처, 각종 보조 및 기타 사업정보, 조달 사업 정보, 수혜자(Awardee/Recipient) 정보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다. 다만 성과정보, 사후 정산 정보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성과정보는 아직까지는 CPARS 등에서 정부 내부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부분은 미래 적용사항으로 현재는 계획되어 있다.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출의 실집행 정보는 Transparency Act, DATA Act에 따라 USASPENDING.gov에 모여서 공개가 된다. SAM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재무관리 시스템이 아닌 범정부 시스템으로서 특히 수혜자 정보를 추출하는 주요 시스템으로 기능하며, FPDS, FRS 등도 IAE에 포함된 시스템들이다. 세출 정보(Appropriations Account), 비목 및 프로그램·단위사업 정보(Object Class and Program Activity), 세부사업 정보(Award Financial)는 아래 그림에는 부처 시스템으로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관리예산처(OMB)에서 사용하는 예산시스템(A-11 Data Entry), 재무부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추출된다. 미국 재정정보 공개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들 재무정보를 다른 외부 범정부 업무시스템으로 끌어와 자료를 결합하지 않고, 별도의 정보 공개 모듈인 DATA Act Broker를 두고 이곳에 재무정보, 업무시스템 실집행 정보를 끌어와서 결합하여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림 II-4〉 미국의 재정정보와 실집행 정보의 결합 공개 체계



자료: GA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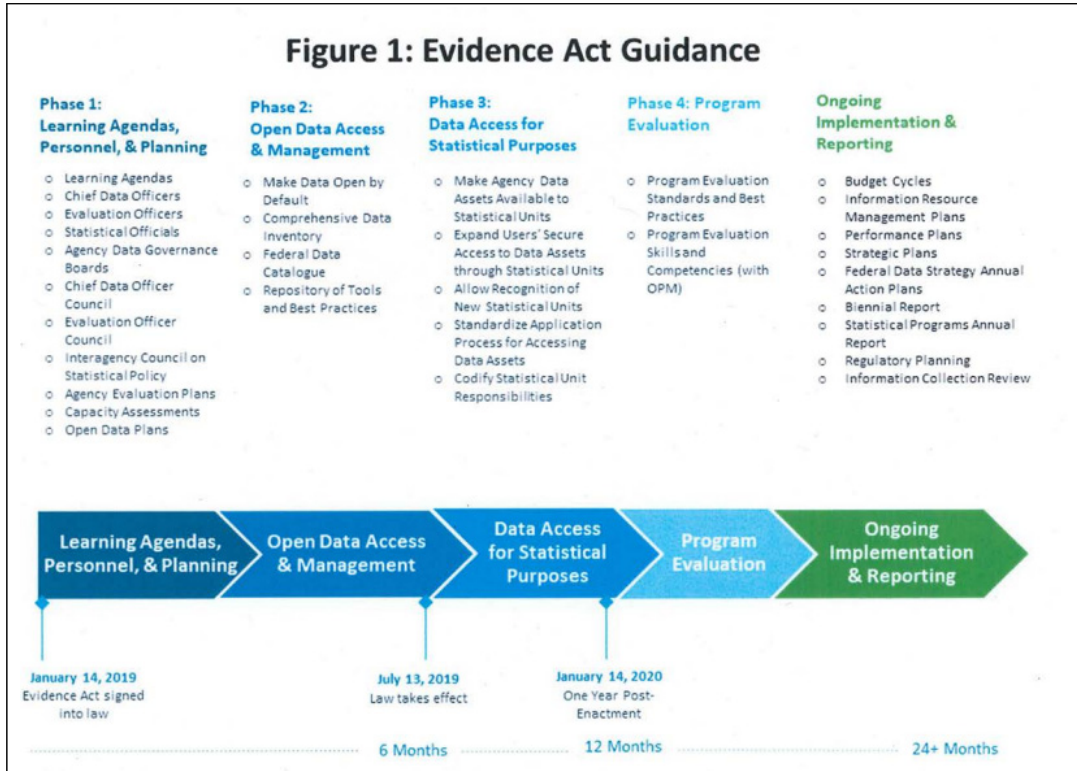
2) 사업평가정보 공개를 위한 evaluation.gov

미국의 성과정보 공개를 위한 공개처는 GPRAMA⁶⁾에 근거한 performance.gov 외에, 최근에는 Evidence Act⁷⁾에 근거한 evidence.gov가 구축되었다. GPRAMA는 각 연방부처에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Evidence Act는 전 부처에서 프로그램 의사결정에 증거 정보 및 평가정보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6) Government Performance Reporting Act Modernization Act of 2010.

7) Foundations for Evidenced-Based Policy Making Act of 2018.

〈그림 II-5〉 Evidence Act 기본 계획



자료: OMB M-19-23.

Evidence Act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 업무 전반에 있어, 즉 의사결정, 집행, 사후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확보, 사용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법안은 정부의 각종 업무, 사업 등의 평가(evaluation)에 대한 정보 사용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TITLE2 부분은 정부 데이터 활용 및 공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⁸⁾ 데이터공개의 기본법으로 보기도 한다.⁹⁾ Evidence Act는 비록 전체 정부 업무를 포괄하고는 있지만,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가 발간하는 회람에 의하면 증거는 정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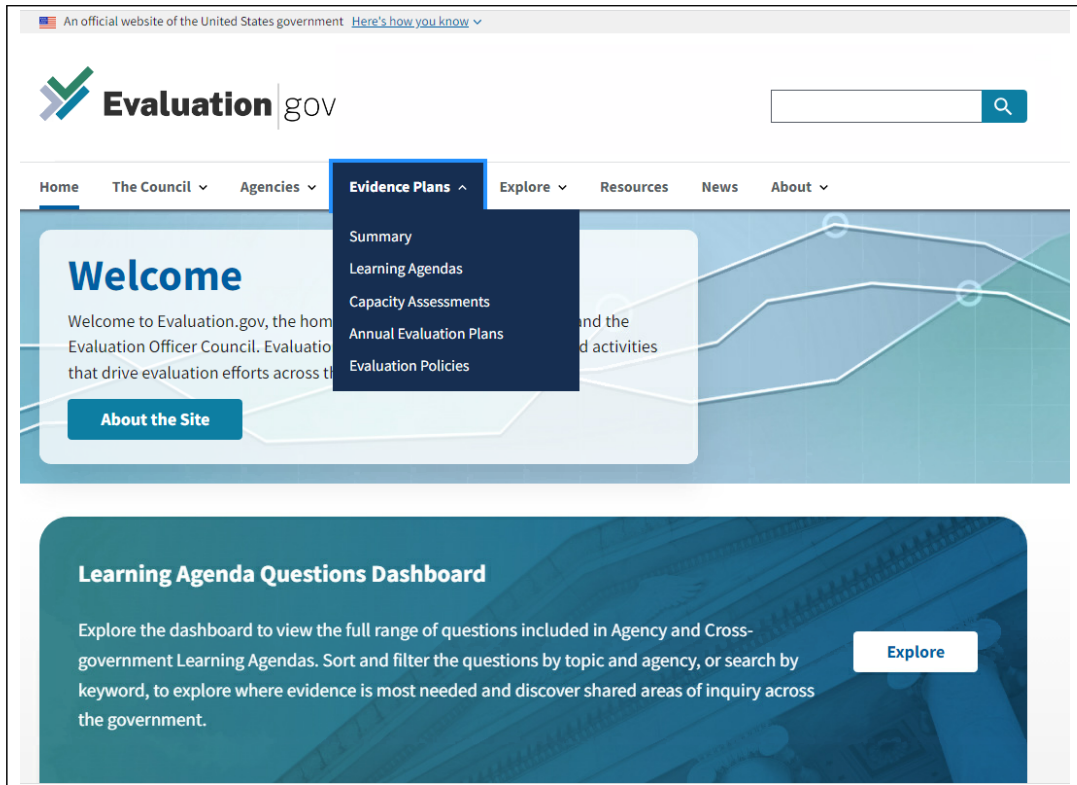
8) 이 부분을 Open, Public, Electronic, and Necessary Government Data Act, 약칭 OPEN Data Act라고도 한다.

9) 그 이전에 제정된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2014)는 비록 DATA Act를 약칭으로 하지만, 대체로 정부 업무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정부 발주 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수행자 및 수혜자 정보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의 결정, 수행, 결과 평가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는 법은 아니다.

을 뒷받침하는 모든 정보로서 그 영역이 사업 관리(program administration), 보조금 사업자 및 수혜자 결정(grant-making)을 포함하며,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사용되는 것이다(OMB, 2021). 증거를 활용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평가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 평가는 무엇이 잘 작동되고 잘 안 되는지 식별하고 그 이유를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위해,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행이 가능한 것이다. 개별 증거의 수집과 활용의 사이클은 전략 계획의 일부로서 학습 아젠다(Learning Agenda) 수립, 연간 평가계획(Annual Evaluation Plan)의 수립과 집행이 4년 동안, 즉 개별 선출 행정부 내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각 선출 행정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증거 수집, 활용 사이클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모든 활동이 계획, 집행, 종료 단계 모두에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학습 아젠다, 연간평가계획은 모두 공개되는 포맷으로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에 맞추어 evaluation.gov가 그해 여름에 오픈했으며, Evidence Act를 따라 평가관리자(evaluation officer)가 지정된 24개 정부 기관은 이 홈페이지에 학습 아젠다와 연간 평가계획을 2022년 초에 작성 및 업로드했다. 4년의 증거 관리 주기에 맞추어, 이 홈페이지에서는 2022년 업로드된 각종 계획대로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지 매년 자료를 갱신하면서 공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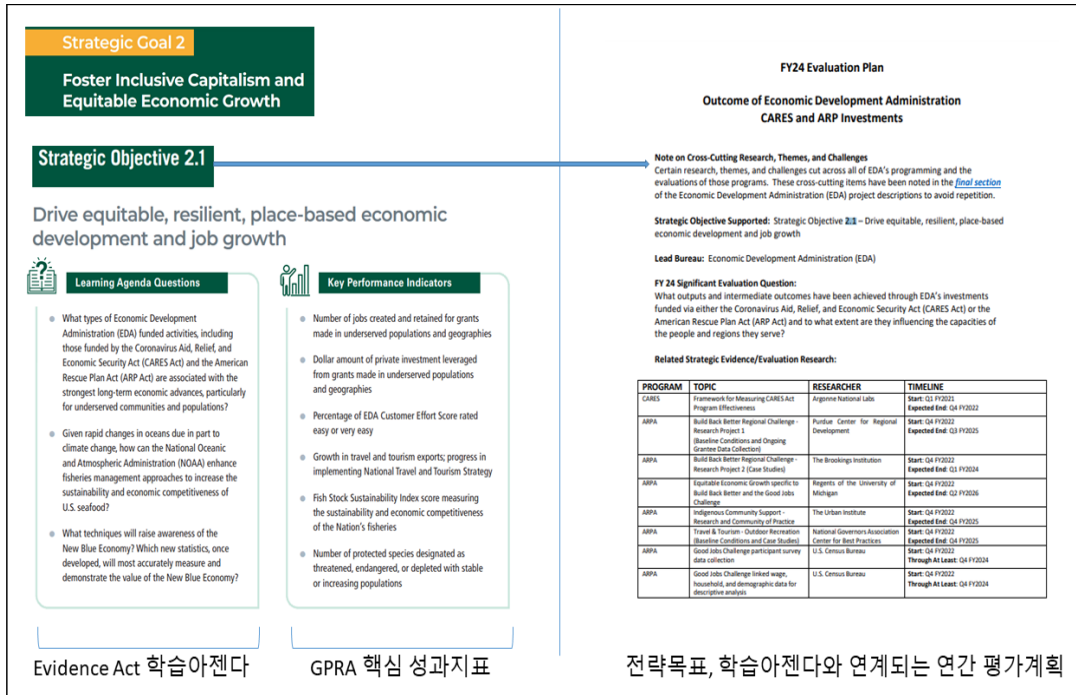
〈그림 II-6〉 evaluation.gov 홈페이지



출처, evaluation.gov(최종 검색일: 2023. 9. 7.)

Evaluation Act는 기본적으로 GPRA Modernization Act의 연방 정부 성과관리 체계를 그대로 따른다. 즉 각 부처 내부에서는 부처 목표, 전략목표로 체계화되고, 기관 우선목표(APG: Agency Priority Goal)가 식별되며, 다 부처 차원에서 다 부처 목표(CAP: Cross-Agency Priority Goal)가 설정된다. Evaluation Act에 의해서, 각 부처의 전략목표는 학습 아젠다로 보완된다. 즉 이전에는 각 부처의 전략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수단이 짧게 기술된 성과 지표와 달성 목표에 대한 수치였다면, Evaluation Act에서는 각 전략목표에 대한 학습 목표, 즉 상당한 수준으로 구체화된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성과 강화 또는 미흡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항으로 보완된다. 이 문항이 각 부처의 평가 계획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와 직접 관련된 조직관리, 재정사업, 집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간 평가계획으로 구체화된다.

〈그림 II-7〉 미국 상무부 전략목표와 학습 아젠다, 연간평가계획 예시



출처: evaluation.gov, performance.gov(최종 검색일: 2023. 9. 7.)

Evaluation Act 이전의 성과관리는 단순히 성과목표와 전략목표, 핵심 성과지표와 이에 기반한 성과계획서, 보고서만이 전부여서 어떤 활동이 성과를 확산하거나 강화할 지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다. 또한 증거기반 행정을 내세웠으면서도 실제 지표 도출을 위한 원시자료 관리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학습 아젠다와 연간 평가계획, 역량 사정(capacity assessment) 및 이에 기반한 신규 평가인력 또는 외부 인력 확보와 관련 예산 확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면서, 연방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가 성과관리와 연계되도록 변화하게끔 한 것이 Evaluation Act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evaluation.gov는 아직 평가에 사용된 원시자료, 증거자료 공개창구로는 기능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근거자료를 연간 평가계획에서 검색하여 다시 data.gov에서 검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평가에 따라서는 실제 보조금 수혜자(award data)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정보들이 IAE를 통해 취합되고 USASPENDING.gov에서 공개가 되므로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고 찾기가 용이하다는 점은 미국 평가-원시자료 관리 및 공개 체계가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국

가. 영국의 보조사업 관리

영국의 보조금은 Grant로 정의되는 것으로, 미국과 대체적인 정의는 같다. 즉 정부가 대가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 추적 매커니즘이 없다. 즉 보조금의 최종 수혜자 즉 실행을 추적하여 보조금 사업의 목표를 최종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항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그동안 각 부처에서 보조금을 각각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개별 수급자가 얼마나 많은 부처와 기관에서 보조금을 수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고, 한 부처에서 보조금 사업 수행자격을 박탈당한 업체가 다시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중복 부정 수급 문제가 행정 집행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일반보조금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General Grants)을 제정하여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절차를 개선하고 서비스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2017년 정부보조금정보시스템 GGIS(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을 개통하면서 대대적으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절차가 전산화, 표준화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결정, 사전조사, 집행, 성과 점검, 평가와 환류가 체계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보조금 업무를 정부 내 별도 조직이 주관하는 것처럼, 영국의 보조금도 특정 부서의 행정조직을 두어 보조금 제도를 주관하고,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보조금의 지급, 사업관리는 물론 각 부처 및 기관의 업무이지만 이를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능(Grants Management Function)은 내각 사무처(Cabinet Office)의 공무원청(Civil Service) 관할 사항이며, 공무원청 밑에 보조금총괄관리센터(Grants Centre of Excellence)를 두어 보조금 시스템 GGIS의 운영 및 관리, 보조금 관련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보조금의 기능적 표준에 의하면, 보조금은 바람직한 일에 대한 재정적 보조 제공,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재정 지원, 정부 정책 홍보 등의 목적을 가진다. 영국의 보조금은 산식 보조금(Formula Grants), 기관운영출연금(Grant in Aid),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으로 나뉜다. 이들 보조금은 영국 총지

출 구분 중 기관지출한도(Department Expenditure Limit: DEL)에 포함되며, 연간 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영국의 보조금은 산식으로 결정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출연금으로 교부하는 기관운영출연금이 포함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대거 AME에 포함되어 보조금에서는 제외되는 특징이 있다.

이를 영국 공공부문 지출통계에서 살펴보면 아래 <표 II-7>와 같다. 영국의 지출은 3개년 단위 스펀딩리뷰로 지출 한도가 통제되는 부처 지출한도(DEL)와, 이에 따르지 않고 매년 단가를 통해 산출하여 지출하는 연간관리지출(AME)로 구분된다. 지출은 다시 경제적 성질에 따라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분류되며, 보조금(grant)은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정부로 환수되는 조달과 대비되는 경제적 성질을 갖고 지자체, 민간, 비영리, 개인 등 전달 체계에 따라 구분된다. 전체 보조금은 2021/22년 기준 4,164억 파운드로 총지출 대비 39.3%에 달하지만, 이중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AME에 포함되는 보조금 2,824억 파운드는 정부 기능표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합계 중 DEL에 포함되는 보조금인 2021/22년 기준 1,340억 파운드, 총지출 기준으로는 12.6%가 관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7> 영국 재정통계 상 보조금 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 %)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경상 보조	DEL	77,229 (9.2)	74,031 (8.6)	79,065 (8.9)	118,065 (10.7)	108,953 (10.3)	107,441 (9.9)	99,383 (9.0)	101,850 (9.0)
	AME	247,170 (29.5)	255,883 (29.8)	259,406 (29.3)	283,771 (25.7)	282,663 (26.7)	301,625 (27.8)	308,443 (28.0)	319,714 (28.4)
	소계	324,399 (38.8)	329,914 (38.5)	338,471 (38.3)	401,836 (36.4)	391,616 (36.9)	409,066 (37.6)	407,826 (37.1)	421,564 (37.4)
자본 보조	DEL	19,906 (2.4)	22,233 (2.6)	22,969 (2.6)	27,873 (2.5)	25,048 (2.4)	31,505 (2.9)	85,452 (7.8)	34,585 (3.1)
	AME	2,035 (0.2)	2,584 (0.3)	3,314 (0.4)	23,489 (2.1)	-185 0.0	7,260 (0.7)	3,623 (0.3)	3,588 (0.3)
	소계	21,941 (2.6)	24,817 (2.9)	26,283 (3.0)	51,362 (4.7)	24,863 (2.3)	38,765 (3.6)	89,075 (8.1)	38,173 (3.4)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합계	DEL	97,135 (11.6)	96,264 (11.2)	102,034 (11.5)	145,938 (13.2)	134,001 (12.6)	138,946 (12.8)	184,835 (16.8)	136,435 (12.1)
	AME	249,205 (29.8)	258,467 (30.1)	262,720 (29.7)	307,260 (27.8)	282,478 (26.6)	308,885 (28.4)	312,066 (28.4)	323,302 (28.7)
	자치 단체	113,103 (13.5)	116,264 (13.6)	116,884 (13.2)	152,478 (13.8)	136,591 (12.9)	124,808 (11.5)	125,383 (11.4)	125,670 (11.2)
	민간· 해외	233,237 (27.9)	238,467 (27.8)	247,870 (28.0)	300,720 (27.2)	279,888 (26.4)	323,023 (29.7)	371,518 (33.8)	334,067 (29.6)
	합계	346,340 (41.4)	354,731 (41.4)	364,754 (41.3)	453,198 (41.0)	416,479 (39.3)	447,831 (41.2)	496,901 (45.2)	459,737 (40.8)
총지출		836,449 (100.0)	857,306 (100.0)	884,119 (100.0)	1,104,299 (100.0)	1,060,301 (100.0)	1,086,609 (100.0)	1,100,289 (100.0)	1,126,943 (100.0)

주) 2021/22까지 결산, 2022/23년 예산. 이후 계획

출처: UK 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is

GGIS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조금 규모는 DEL보다는 약간 크지만 전체 보조금 규모 대비로는 40~6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GGIS에서 추출되는 보조금 통계는 2020/21년 2580억 파운드, 2021/22년 1720억 파운드로 당해연도 총지출의 56.9%, 41.3% 수준이다. 이는 총 보조금에는 기관운영보조금이 포함되지만 GGIS에서는 관리하지 않는 점, 의무지출성 또는 현금 급부성인 AME 지출이 대거 제외되는 등 관할범위의 차이, 통계 작성 시점 차이 등 오차적 요인¹⁰⁾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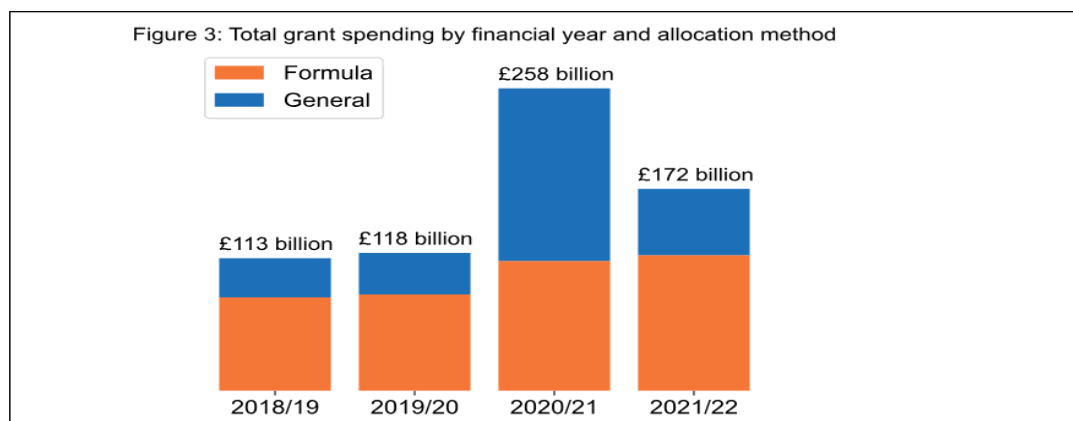
기관출연금(Grant-in-aid)의 경우직접적인 표준지침의 통제를 받지 않지만 이를 수령한 공공기관(ALB: Arms-Length Body)이 이를 일반보조금 또는 산식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들 보조금은 비록 기관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운영비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하면 GGIS에 등록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GGIS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규모는 2021-2022회계연도 기준 1,721억 유로로, 정부 총지출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일정한 산식에 의해 배분되는 산식 보조

10) PESA 결산 통계는 국고에서 교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GGIS 통계는 지불 금액의 현금 기준 중 현재 지급액(실집행액) 또는 지출예정액을 사용하는 부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 통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금(formula grants)는 164개 사업 1,158억 유로로 총 보조금 중 67% 수준을 차지한다. 그 외 배분되는 일반보조금은 1,782개 사업에 563억 유로이다. 두 보조금 유형을 합한 총 보조금 수령 건수는 17만 7천 건에 이른다. 보조금 관련 정보는 GGIS 이전에는 정부 재정통계를 통해 일부를 확인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GGIS 개통 후에는 상세 재정통계가 공개되고 있다.

〈그림 II-8〉 영국 정부 보조금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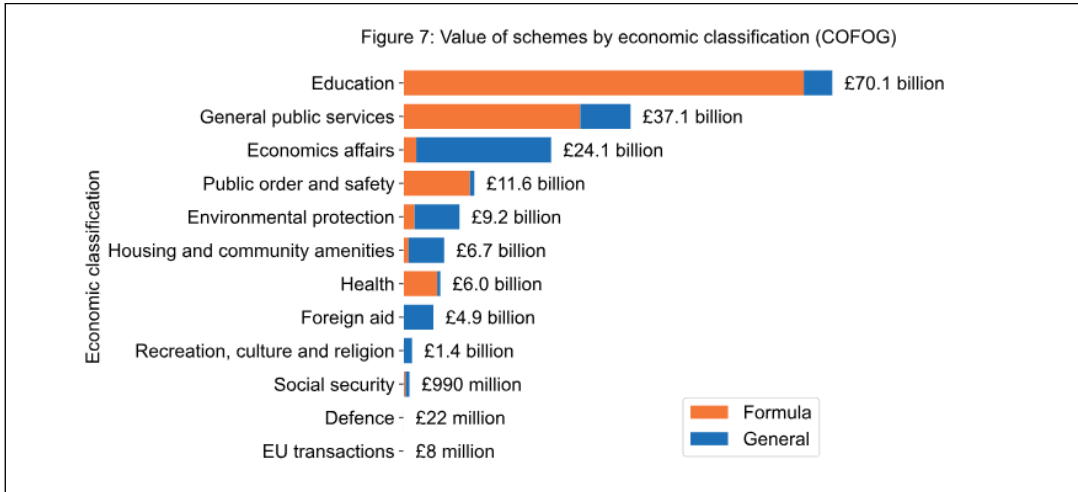


자료: gov.uk

영국의 보조금 규모는 코로나 19 사태로 급증했다. 특히 가장 극심했던 2020/21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2021/22회계연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한 에너지 지원사업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큰 보조금 지급 규모를 유지했다. 일반보조금 563억 유로 중 자영업자 소득보조(83억 유로), 고용유지지원금(82억 유로), 재도약지원금(34억 유로), 친환경에너지 지원금(BEIS, 9억 유로) 등 대규모 사업이 2021/22회계연도에도 유지되었다.

기능별로 보면, 산식으로 배분되는 교육분야, 일반행정 분야 보조금의 규모가 크며, 보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보조금도 대부분 산식으로 배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경제 기능,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대외원조, 문화·종교, 사회보장 등의 보조금은 일반 보조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그림 II-9〉 영국 보조금의 정부기능별 배분



자료: gov.uk

나. 보조사업 성과관리와 지원시스템

1) 보조사업의 성과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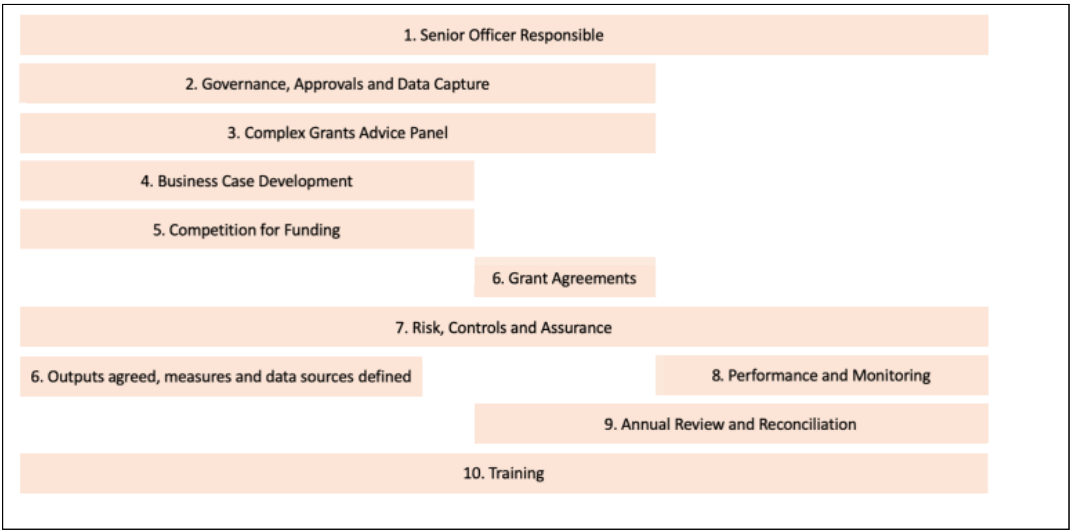
영국 정부의 모든 서비스와 기능은 일정한 기능적 표준(functional standard)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는 범정부적으로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는 내각사무처의 통제를 받는데, 내각사무처 역시 보조금에 대한 지침에서 보조금 지급의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요구사항(minimum requirement)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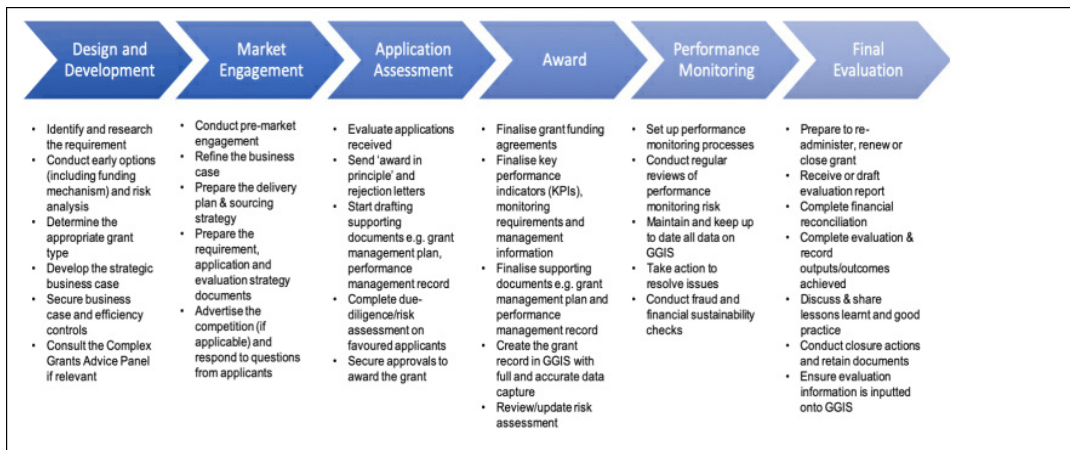
보조금의 표준적인 관리절차는 아래 〈그림 II-10〉과 같다. 통상적으로 보조금은 정책개발/편성(Design and Development), 사전조사 및 착수(Market Engagement), 사업자 적격성 심사(Application Assessment)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Award)하게 된다. 개별 사업자 단위, 즉 보조사업자 단위로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가 확정되며, 이때부터 보조금의 성과관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성과 점검(Performance Monitoring)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중복부

정수급 점검을 하면서 KPI 달성 여부를 추적하게 된다. 사후 평가(final evaluation)는 어휘로만 보면 사업이 종료된 후의 평가처럼 보이지만 이 외에도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적정성 평가(Rconciliation)도 포함되며, 연단위로 해당 사업을 계속 할지, 보조사업자를 유지할지 아닐지 판단하게 된다.

분석(analysis)은 이 모든 단계에서 수행된다. 영국 정부는 분석을 정부 기능표준의 하나로써 보조금과 동일한 격으로 보고 있다. 분석은 정책, 사업의 전달과 운영, 개선을 지원하는 협력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분석은 단순한 정책 보고서 상 정책제안에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문제인식(Rationale), 목표설정(Objectives), 사전평가(Appraisal), 점검(Monitoring), 사후평가(Evaluation), 환류(Feedback)가 하나의 분석 사이클을 이루며, 이를 ROAMEF라고 하여 모든 정부 정책사업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금도 예외는 아니다. 즉 단순히 분석을 어느 한 국면에서의 보고서 작성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의 모든 정보 생산 과정을 분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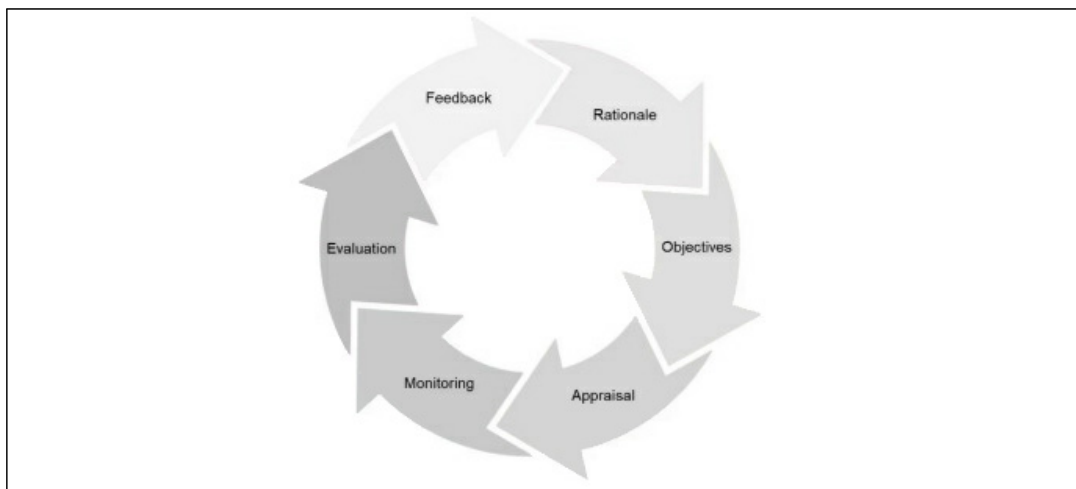
〈그림 II-10〉 보조금의 관리 절차





자료: UK Cabinet Office, Guidance for General Grants: Introduction

〈그림 II-11〉 영국 정부 기능 표준 중 분석 기능의 개념



자료: uk.gov

위와 같은 분석 절차를 따라, 보조금에 대한 성과 관리와 사후 평가는 아래와 같이 3개의 범주에서 이루어진다.

① 성과 점검(performance monitoring)

보조금은 지급(award) 단계에서 보조금 협약(grant agreement)을 확정하며 이루어진다. 이 협약에는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과 정보(performance metrics)를 포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연간 관리계획과 성과관리 기록 양식이 포함된다. 성과 점검은 이와 같은 연간 관리계획과 성과관리 기록이 충실히 이루어지는지를 집행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되고 있는지, 산출물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성과 점검의 목적이다. 성과 점검은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주무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서는 이를 점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관서의 점검은 부패와 실수(fraud and error)를 탐지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부적합한 보조금 사용이 적발되면 이는 환수의 대상이 된다.

② 적정성 평가(Reconciliation)

적정성 평가는 재정투입의 효과를 판단하는 수단이다. 영국 정부기능 표준 문서에 의하면 적정성 평가와 심층평가는 모두 분석 사이클 중 평가(Evaluation)에 포함되지만, 보조금 기능 표준에 의하면 적정성 평가는 매년 사업 담당자가 고위 공무원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심층평가는 고위 공무원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 보고 있다.

적정성 평가는 투입 효과의 확인 측면에서, 보조금이 당초 투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회계연도 연말에 수행하는 재무적정성 평가는 보조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달성 여부, 산출물의 최종 전달 여부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고위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하게 된다. 이 정책제안은 현행 계획의 계속 여부, 차년도 예산 증·감액 여부, 산출물에 대한 재정의, 보조금 투입액 환수, 부정수급 환수, 보조금 지급 종료 등의 형태를 가진다.

③ 심층평가(Evaluation)

심층평가는 정책 목적 또는 국정과제 측면에서 이것이 의도한 기능을 달성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심층평가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 총책임인 고위공무원에게 있다. 심층평가의 범위와 규모는 일선 관서와 재무관서의 협의 하에 결정된다. 심층평가는 적정성 평가 결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판단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심층평가는 또한 특정 정책개입의 실패 여부, 목표의 초과달성 등의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심층평가를 통한 교훈, 우수사례 등은 전 부처에 공유할 수 있다.

성과관리의 목표는 상시 개선과 학습에 있다. 상시 개선은 범정부 또는 개별 기관 수준에서, 보조금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화되어 개선된 산출물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성과 점검, 적정성 평가와 심층평가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해당 사업 과정에, 또는 전부처의 보조금 결정 및 집행 과정으로 환류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수혜자에게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평가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2) 보조사업관리시스템 GGIS

영국의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GGIS는 처음에는 집행에서의 사업자 관리, 중복·부정수급 관리에서 시작했으나, 현재는 보조사업의 초기 단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보조사업 초기단계에서 정부 개입의 적절한 방식 즉 사업 방식을 식별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은 2021년 보조금 의사결정(Grants Pipeline Control) 절차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공식화되었으며, 보조금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각종 정보가 GGIS에 정보가 저장되기 시작하고 있다.

간략한 영국의 보조금 시행 과정, 책임 주체 및 GGIS의 관계는 아래 <그림 II-12>과 같다. 재무부(Finance)와 상무부(Commercial)이 단계마다 통보(Informed)받거나 개입(Consulted)하는 가운데, 부처와 지자체, 준정부기관(Policy/ALB)가 대부분의 자료입력 및 집행 책임(Responsible)을 지고 사업 담당 고위담당자(SRO/Senior Responsible Officer)가 최종책임(Accountability)을 지는 구조이다. 상무부는 주로 개입형태가 많은 반면, 재무부는 주로 정책개발, 모니터링 등에 책임이 있고 평가에는 개입하는 형태를, 상무부는 직접 정책개발 등에 개입하지만 평가권은 없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12〉 영국 보조금 집행의 단계와 책임

Key:

R = Responsible
A = Accountable
C = Consulted
I = Informed

Tasks	Roles					
	SRO	Finance	Commercial	Policy/ALB	Legal	Audit
GGIS*	A	I	I	R	I	I
Policy Development	A	A	C	R	C	I
NGAP: Referral/ Advice	A	I	I	R	I	I
Business Case	A	A	C	R	C	I
Grant Agreement	A	A	R	R	C	C
Monitoring/ Assurance	A	A	C	R	I	C
Reporting	A	I	I	R	I	I
Evaluation	A	C	I	R	I	I

* This refers to the input of information to the system.

자료: uk.gov

GGIS에 입력되는 각 보조금 사업(Scheme) 별 데이터 필드는 다음과 같다. 각 항목을 속성으로 관리하며, 비교적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GGIS의 사업정보DB는 사업 구상단계부터 작성된다. 사업 구상부터 확정, 시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조금 결정(Grant pipeline)이라고 한다. 신규사업은 사업정보를 GGIS에 업데이트하면서 시작하지만, 다년간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의 속성정보, 사업 특성 정보는 비교적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사업 결정자와 시행자 관점에서 누가 시행하고, 사업방식은 무엇이며 금액은 어떤지 등이 주로 입력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입력정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데이터(key data)로 간주되며, 보조금 집행의 지원 및 보고의 일부이다. 자료의 입력과 관리 등 최종 책임자는 사업 고위담당자(SOR)이다. 다만 연간 리뷰 및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당해 연도 집행이 완료되는 경우, 평가 결과 정보는 GGIS에 입력되지 않고 각 소관 부처와 조직의 정보관리정책에 따라 저장되고 관리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GGIS의 사업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의 사업 적정성 평가, 심층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GGIS 시스템 역시 즉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8〉 GGIS의 사업정보 데이터 필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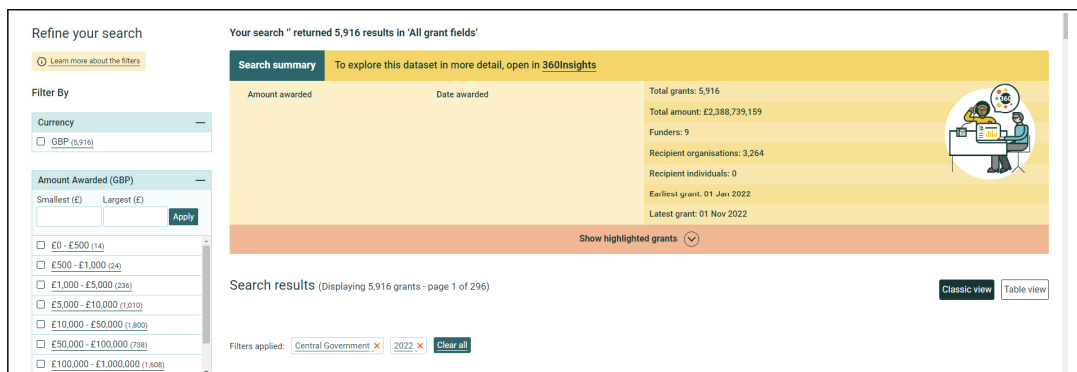
필드명	영문명	데이터형식	선택옵션
사업ID	GGMF ID	문자+숫자 조합	자동입력
부처명	Department	문자	자동입력
부처ID	Department Scheme ID	문자+숫자 조합	자율입력
시행주체	Managed by(e.g. ALB, local)	문자	사업 중간관리자(입력)
사업명	Scheme name	문자	
사업방식	Allocation Method	선택	정률, 일반(공모), 일반(비공모), 일반(직접), 일반(혼합), 기관운영 중 택1
섹션31	Section 31	선택	지방정부법 31조 해당여부(중앙→지방 직접보조)
사업목적	Scheme purpose	선택	COVID19, EU사업, EU탈퇴관련, 정책사업(Manifesto commitment), 기타(BAU) 중 택1
추정금액	Estimated Value	숫자	사업비 수치입력
추정 시작일시	Estimated Payment Start Date	날짜	사업비 지급 시작 일시 입력
담당자명	SOR Name	문자	고위담당자 (Senior Officer Responsible) 명
담당자 Email	SOR Email	문자	고위담당자(Senior Officer Responsible) 이메일주소
비고	Comment	문자	사업에 대한 중요정보 입력
신규여부	New vs rollover	선택	신규, 계속 중 택1
중간사업자	Intermediaries Involved	선택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ALB), 해당없음 중 택1
수혜자수	Number of Recipients	선택	1000+, 11-1000, 10명 미만 중 택1
개인/사업자 여부	Eligibility of individuals or sole traders	선택	예, 아니오 선택
리스크	Are there any characteristics of this scheme that make it particularly complex or high risk?	문자	사업의 복잡성, 불확실성에 대해 서술 입력

자료: UK Cabinet Office. Grants Pipeline Control Framework

다. 영국의 보조사업 성과정보공개

영국의 360giving은 2014년 자선사업을 수행하는 인디고 트러스트, 복권기금 등이 합쳐져 설립된 자선단체이다. 당초 영국 혁신처 Nesta의 일부로 설립되었으나 2015년 독립되었으며, 2016년부터 보조금 관련 정보 허브 기능을 시작했다. 2016년 최초로 보조금(grant) 정보, 보조사업 검색 기능을 제공했는데, 360giving의 보조금 관련 정보는 단지 정부 기능의 그것만 국한하지는 않으며, 당초에는 자선단체의 구호금에서 시작했다. 정부 보조금 정보는 2017년 40억 파운드 규모의 정보부터 개방하기 시작했다. 사법부와 교통부 데이터를 시범 공개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조사업 데이터 표준 역시 360giving이 제시한 것을 정부가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II-13〉 360giving이 제공하는 GrantNav 화면



자료: threesixtygiving.org. (최종검색일 2023. 10. 30.)

영국 정부의 보조금 공개의 특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전담하지 않고 자선단체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조금(grant)이라는 것의 특성, 즉 지급 이후 별도의 부가세 징수 절차가 없다는 행정적 특성에서 연유하며, 민간과 공공의 보조금을 함께 추적해야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360giving의 보조금 검색(GrantNav)서비스에 등록된 민관 포함 기관 수는 268개에 달하며, 총 사업 수는 94만 개, 2,200억 파운드에 달한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central government)에서 2022년 기준으로 제공한 보조사업은 총 5,916개 사업,

20억 달러 규모였다. 제공 기관은 9개이고, 총 3,264개 사업자가 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보조금은 민간 기관보다 작은 편이다.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 uk.gov도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이곳에서는 각종 사업 평가 결과, 사업자 등록 현황, 국고보조사업 통계 등을 제공한다. 사업 평가 결과는 텍스트 형식으로, 사업자 등록현황과 국고보조사업 통계는 각각 데이터 형태를 제공한다. 영국 정부와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등급(rating)을 매기는 형태의 평가는 존재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았다. 사업자별 등급과 평가 결과는 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개별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3. 주요국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시사점

보조금은 영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각종 재정 지출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조금의 사업 목적과 내용, 금액은 국가별로도 다르지만 각국에서 시대별로도 다르며, 그 관리 방법과 기술 역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 기법 발전은 지출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업무의 중복 방지, 수급에 있어서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다양하다.

다만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온 제도이다 보니, 새로운 평가 기법, 절차 등의 제도개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특히 보조금과 조달 사업에 있어 1990년대까지 무분별하게 각 부처와 사업군 별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한 결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효율화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지금은 단일의 창구에서 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부처에 따라, 지방정부에 따라 서식도 다르고 요구하는 정보의 수준도 달랐다. 따라서 유사한 사업자, 보조사업끼리

묶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20여 년에 걸친 전산 현대화, 표준화 및 제도개선은 비록 감사원 등에게 과도한 비용 상승 등의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그나마 현대에는 그나마 사업자 간 비교, 사업 간 비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전이 되었다. 물론 재정정보 공개의 프레임워크에 아직까지도 각종 성과정보가 통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지만, 향후 미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통합될 여지는 남아있다.

영국도 제도 개선과 신규 전산시스템 도입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 영국의 GGIS 시스템은 당초에는 제도의 일부, 즉 중복 부정수급 방지 등 법과 제도에 의해 결정된 사업의 집행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신규 시스템 도입은 여전히 영국 정부의 보조금 집행의 표준화 수준이 낮고, 집행 효율화를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016년 일반보조금 지침 제정 후 GGIS는 보조금 개혁의 일부가 되었으며, 의사결정 과정 개편, 성과관리 표준화 등의 일련의 제도 개선에 발 빠르게 적응해나가고 있다.

물론, 영국과 미국의 성과관리 제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국가의 제도 개선과 시스템 도입 사례를 일반화하여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조금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며, 이를 제도와 전산화로 녹여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은 공통이다. 제도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전산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적응도 요구된다. 우리나라에도 가해지는 혼한 비판은, 시스템 구축과 유지·운영에 많은 돈이 드는데 그만한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없어서 제도개선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하게 가해지는 이러한 비판을 감수하고, 구축 및 운영 효과의 불확실성을 감내하고서라도 많은 국가에서 제도개선과 전산 시스템을 운영 유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운영의 원리가 각종 제도가 둘러싸고 있는 정부 본연의 임무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각 제도들 간의 정합성과 구성의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정부의 유일한 업무수행방식은 아니며, 이것이 다른 방식보다 월등하게 효율적이라는 것은 아직 입증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조금을 과거보다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개선하고, 끊임없이 변화하

는 환경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며, 전산 시스템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것은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가 보조금의 재원인 국민의 납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이에 따라 영국, 미국은 보조금의 집행과정의 투명화, 그리고 사업 결정 과정의 투명화와 전산화, 정보 축적이라는 단계는 넘어선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정부가 행하는 각종 업무의 성과지향성을 뒷받침하며, 또한 생산되는 각종 성과정보의 생산과 축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각 보조사업자별 사업 수행결과 데이터가 상당한 수준으로 표준화, 축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평가가 가능해졌으며, 법적으로도 근거기반정책법 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된 상태이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각 보조사업자 데이터베이스가 완비되고 사업 수행 결과 정보가 저장되기 시작하면, 각종 평가 업무에 이러한 사업 내역별, 보조사업자별 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찬가지로 집행과정 투명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각종 재정정보가 모이는 허브이기도 함과 동시에, 각종 재정사업을 시작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영국의 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재정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현재 구축되기 시작한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데이터와 결합한다면 이는 의사결정 과정 표준화와 합리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정보 공개를 위해 미국의 그것과 유사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한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데이터 결합, 활용, 공개에 이르기 전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두 시스템이 어떠한 보조금 정보를 담고 있는지, 사업정보 활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가로 전산화가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Ⅲ. 국내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1. 우리나라의 보조사업 관리

본 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관리 현황이 어떠하며, 어떠한 정보들이 시스템에서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2022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초과했음은 전술한 바 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코로나 19 시기의 급증분(2020→2022 3.3조 원)이 2023년 순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 국고보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6~7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후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 역시 2020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 규모가 증가한 것에서 일부 기인한다.

〈표 Ⅲ-1〉 국고보조사업 예산 추이

(단위: 조 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회계	33.1 (54.9)	33.7 (56.5)	39.8 (59.4)	47.7 (61.3)	53.3 (61.5)	61.1 (62.4)	62.6 (61.1)	62.7 (61.3)
특별회계	17.1 (28.4)	15.9 (26.7)	16.7 (25.0)	18.2 (23.3)	18.1 (20.9)	19.7 (20.1)	21.2 (20.7)	23.8 (23.3)
기금	10.1 (16.7)	10.0 (16.8)	10.5 (15.6)	12.0 (15.4)	15.3 (17.7)	17.1 (17.4)	18.6 (18.2)	15.8 (15.4)
합계	60.3 (100.0)	59.6 (100.0)	66.9 (100.0)	77.9 (100.0)	86.7 (100.0)	97.9 (100.0)	102.3 (100.0)	102.3 (100.0)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최종검색일: 2023. 10. 18)

세목별로 살펴보면 어떠한 성격의 사업지가 증가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간 자본보조가 2017년 대비 2023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는 2017년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민간경상보조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2022-2023년 양년에 걸쳐 4.3조 원이 감축되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역시 코로나 19 시기 급증했지만 2023년에는 그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증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일어났다. 2023년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2017년 대비 2배 규모였다. 일반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증가가 국고보조사업의 양적 팽창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 국고보조사업 세목별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민간경상보조	12.2	11.5	15.2	17.4	19.1	20.8	20.0	15.7
	(20.3)	(19.3)	(22.7)	(22.3)	(22.0)	(21.3)	(19.6)	(15.3)
민간자본보조	2.0	1.7	1.6	1.7	2.0	2.2	2.8	3.5
	(3.4)	(2.8)	(2.3)	(2.1)	(2.3)	(2.3)	(2.8)	(3.5)
자치단체경상보조	31.3	32.3	35.9	43.4	49.4	55.6	59.5	65.6
	(51.9)	(54.2)	(53.6)	(55.7)	(57.0)	(56.8)	(58.2)	(64.1)
자치단체자본보조	14.7	14.1	14.3	15.5	16.2	19.2	19.9	17.6
	(24.5)	(23.7)	(21.4)	(19.9)	(18.7)	(19.6)	(19.5)	(17.2)
합계	60.3	59.6	66.9	77.9	86.7	97.9	102.3	10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최종검색일: 2023. 10. 18)

국고보조사업은 다양한 이유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과 환경 정책 목적에서 전기차 보조금 등의 사업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큰 규모로 증가해 온 국고보조사업을 성과 관점 또는 평가를 통해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이 꾸준히 도입되어 왔다. 이 국고보조사업 관리제도를 중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추려 보면 다음 〈표 Ⅲ-3〉와 같다.

아래 표를 보면 각 정부 별로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면서, 지방양여금 등을 폐지하고 국가-지방 기능조정으로 많은 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한 바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해 편성에 대한 자율성을 증진

하면서 사후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균형발전 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 제도를 신설했으며, 국고보조사업 일몰제와 연장평가를 대대적으로 도입했다. 연장평가는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을 주기로 평가하고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포괄보조금제는 그 이전까지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각 보조사업 간의 자원 배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없던 것을 변경한 제도이다. 즉 특정 지방자치단체에게 각 부처에서 포괄로 자원 배분을 하면, 각 사업에 대한 세출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이 국정과제로 처음 등장했다. 국고보조사업 전주기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며, 지속적으로 보조금 관리제도를 개선했다. 2016년에는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도입했으며, 국고보조사업수 총량제를 실시해 연장평가 결과 사업을 한 해에 10%씩 통폐합,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2017년부터는 성과계획서에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지표를 의무적으로 기입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제도를 실시했다.

〈표 III-3〉 역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관련 주요 내용

정부	연도	국고보조 및 성과관리 관련 내용
노무현	2005	균형발전 영향평가 실시
	2006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에 따른 지방이양 추진 국고보조사업 민간참여확대
	2007	복지사업 차등보조 방식 도입
이명박	2008	포괄보조금제 도입검토, 차등보조율 확대
	2009	농어업보조금 개편
	2010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보조사업투융자심사등사전심사강화 보조금취득재산공시제도
	2011	사업군 심층평가제도 도입
	2012	급증 보조금 세출구조조정(평가 예산반영) 지방투자보조금제도개선
박근혜	2013	국고보조 사업 개편(포괄보조 전환) 유사중복정비, 집행부진사업축소
	201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앙과지방간기능및자원조정

정부	연도	국고보조 및 성과관리 관련 내용
		부정수급등낭비성사업구조조정(누수차단) 국고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구축결정 포괄보조확대
	2015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회계감사 도입 보조사업운용평가전사업대상확대 국고보조사업수총량제(10%감축)
	2016	보조금법 개정,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도입
문재인	2017	국고보조사업 정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개통및제도개선 국고보조사업성과지표제도입
	2018	국고보조사업 개편
	2019	포괄보조 일부 지방 이양
	2020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출구조조정 확대
	2021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정비 보조사업연장평가강화
윤석열	2022	관행적 보조금 재정비(민간경상보조금 대상) 보조사업 전달체계 단축
	2023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출처: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제도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골격을 대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신규 국고보조사업 심사, 일몰제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포괄보조 확대 및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관리제, 중복·부정수급 관리와 국고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요약되는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제도는 큰 변화 없이 현재에도 이어져오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코로나19 사태대응 등을 목적으로 이후에 크게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큰 틀은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사업 개편, 지방이양, 평가 및 지출구조조정 강화 등은 이미 완비된 제도의 틀에서 수행이 가능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2. 보조사업 성과관리와 지원시스템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는 2011년에,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관리제는 2017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국고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중복·부정수급 관리

정보가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는 모두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도록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서류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첨부서류로 되어 있다. 2017년부터 국고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면서 그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시범 입력이라 할 수 있는 2017년을 제외하고, 결과보고서까지 완료된 2018년~2022년의 성과지표 설정 추이는 아래와 같다.¹¹⁾

〈표 III-4〉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기준 성과지표 설정 추이

(단위: 십억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설정	57,057	72,048	82,079	93,030	70,338
미설정	9,965	6,031	5,134	4,967	32,008
총합계	67,022	78,080	87,213	97,997	102,346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결산 성과보고서. 각 연도

〈표 III-5〉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추이

(단위: 개)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지표수	1585	1734	1821	1919	1288
달성지표수	1264	1385	1296	1493	1004
달성률	79.7	79.9	71.2	77.8	78.0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결산 성과보고서. 각 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정비에 따라, 2018년, 2019년에 미설정 사업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지표 미설정 사업은 2021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2년 크게 증가했는데,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누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향후 몇 년 내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이 감소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추세에 따른

11) 일부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위탁 전환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에 대해 누락되거나 오기입된 사업이 있었다. 이 사업은 제외한 수치이다.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설정 사업 금액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운용 및 이에 따른 사후적 책임 관리라는 보조사업 성과관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총 지표수는 2018년 1,585개에서 2021년까지 1,919개로 증가했다. 지표 달성률은 코로나19로 다수 사업이 집행부진에 빠졌던 해를 제외하면 7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지표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21년을 기준으로, 지표의 수는 농림수산,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교통및물류, 보건 등의 순이었으며, 16대 분야 중 이 7개 분야의 지표는 각 분야 기준 100개를 넘고, 전체 분야 지표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달성률은 환경부가 높았고,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의 순이었다. 달성률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달성도가 높아지는 분야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하고 하락 추세인 경우도 관찰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 분야처럼 국고보조사업의 지표를 신규로 설정하는 분야는 평균 달성률이 100%에서 75%로 하락하기도 했다.

즉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관리에 있어서는, 단순히 달성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의 상향, 신규 지표의 설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지표가 단순히 관리되고 있기만 하고, 교체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면 곧 100%에 근접한 달성률을 보게 될 것이다. 신규 지표의 교체, 목표 상향 등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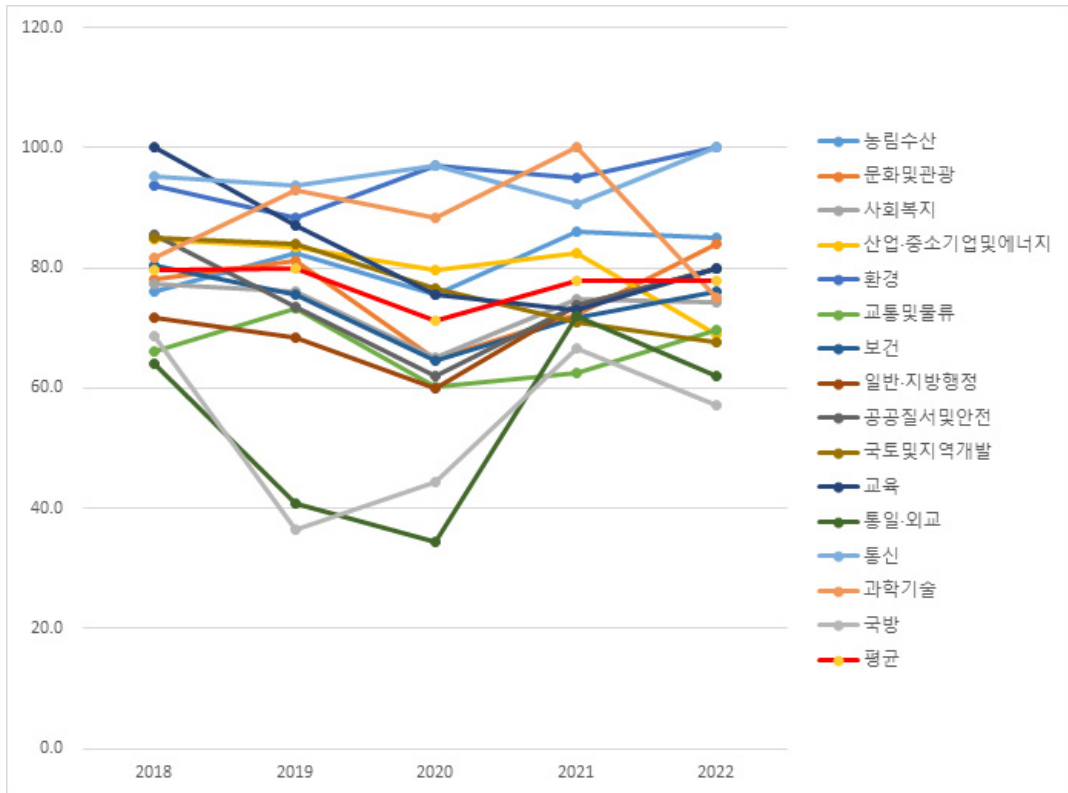
〈표 III-6〉 연도별,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달성 추이

(단위: 개, %)

	2018			2019			2020			2021			2022		
	지표수	달성수	달성률	지표수	달성수	달성률	지표수	달성수	달성률	지표수	달성수	달성률	지표수	달성수	달성률
농림수산	297	226	76.1	327	270	82.6	295	223	75.6	320	275	85.9	287	244	85.0
문화및관광	78	61	78.2	288	234	81.3	301	195	64.8	313	226	72.2	238	200	84.0
사회복지	265	205	77.4	250	190	76.0	307	200	65.1	283	212	74.9	202	150	74.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89	160	84.7	175	146	83.4	173	138	79.8	199	164	82.4	148	102	68.9
환경	174	163	93.7	182	161	88.5	170	165	97.1	180	171	95.0	1	1	100.0
교통및물류	186	123	66.1	116	85	73.3	151	91	60.3	174	109	62.6	96	67	69.8
보건	122	98	80.3	110	83	75.5	138	89	64.5	142	102	71.8	109	83	76.1
일반·지방행정	46	33	71.7	57	39	68.4	60	36	60.0	65	48	73.8	55	44	80.0
공공질서및안전	55	47	85.5	49	36	73.5	50	31	62.0	57	42	73.7	20	16	80.0
국토및지역개발	47	40	85.1	50	42	84.0	51	39	76.5	48	34	70.8	37	25	67.6
교육	32	32	100.0	31	27	87.1	37	28	75.7	48	35	72.9	35	28	80.0
통일·외교	25	16	64.0	27	11	40.7	29	10	34.5	32	23	71.9	29	18	62.1
통신	42	40	95.2	47	44	93.6	33	32	97.0	32	29	90.6	16	16	100.0
과학기술	11	9	81.8	14	13	92.9	17	15	88.2	17	17	100.0	8	6	75.0
국방	16	11	68.8	11	4	36.4	9	4	44.4	9	6	66.7	7	4	57.1
총합계	1585	1264	79.7	1734	1385	79.9	1821	1296	71.2	1919	1493	77.8	1288	1004	78.0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결산 성과보고서, 각연도

〈그림 III-1〉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의 분야별 평균 목표 대비 실적 달성도 추이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결산 성과보고서, 각연도

〈표 III-7〉 국고보조사업 사업별 지표수 설정 추이

(단위: 개)

사업당 지표수	2018	2019	2020	2021	2022
1	862	933	996	1055	806
2	215	247	253	275	144
3	70	75	75	80	50
4	8	11	19	14	6
5	3	4	-	-	4
6	6	3	3	3	-
미설정	468	424	419	334	788
총합계	1632	1697	1765	1761	1798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결산 성과보고서, 각 연도

다음은 개별 세부사업별로 몇 개의 지표가 설정되고 있으며, 그 추이는 어떠한지에 대한 것이다. 대략 1~2개 수준의 지표가 설정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지만, 하나의 세부사업에 3~4개 또는 그 이상의 지표가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민간/지방자치단체 보조, 경상/자본보조가 혼합편성될 수 있고, 직접사업도 함께 편성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여러 지표가 설정되는 사업의 내역이 복잡하게 편성되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향후에는 2~3개의 사업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현행으로 관리를 하려면 하나의 사업에 배정된 지표 관리를 더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는 있다.

즉 지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음을 확인하려면 달성률이 높아진 사업의 성과목표를 높이고 있는지, 신규로 교체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표관리 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지표 관리를 위한 정보, 즉 신규등록, 폐지, 지표 상향 등에 대한 입력 코드가 없이 지표를 매년 신규 등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 변경, 지표 변경 등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각 지표의 통폐합과 신규 지표 개발 등 부처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종합적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다. 지표 우선순위,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을 세부사업 단위가 아니라 지표 단위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정보이다. 현행 지침은 모든 사업에 대해 3년을 주기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 대상 사업의 수는 매년 정책목적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이 제외되는 특성상, 평가 미 실시 사업의 예산 비중은 70%보다도 높은 편이다. 사업수와 예산액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의 사업이 평가대상이 된 해는 코로나19사태가 발발했던 2020년이며, 이때에는 사업수 기준으로 15%에 해당하는 248개만이 평가 대상이었는데 이는 전년도인 2019년보다도 200개 이상 적은 것이었다. 평가 대상 사업수는 2021년에는 2019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21년에는 최근 5년 간 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를 실시했다. 2022년에는 사업수 기준으로는 더 많은 503개의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도와는 소폭 감소했다.

〈표 III-8〉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 추이

(단위: 십억원, 개)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액 기준					
평가 대상	13,143	11,635	8,571	20,560	18,097
평가 미실시	53,879	66,444	78,642	77,438	84,250
사업수 기준					
평가 대상	375	449	248	463	503
평가 미실시	1257	1248	1517	1298	1295
총합계	1632	1697	1765	1761	1798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각 연도

위 자료에서 살펴보듯,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추세,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설정 추세와는 다르게 연장평가 대상 사업은 규모와 사업수가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일정 주기별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업평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종종 평가에서 누락되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평가주기, 최근 사업평가 연도 등을 관리하며 점점 대상사업을 면밀히 점검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판정 결과의 추이이다. 2019년까지는 정상추진의 비중이 높았지만, 이후 사업방식 변경, 감축 판정의 사업 수가 많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단계적 폐지 역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2022년에는 즉시폐지 사업도 20개에 달해 가장 많았다.

감축과 사업방식 변경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단순히 사업의 존치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조정, 사업 효과성 제고 등도 목적으로 하는, 성과관리의 성격이 강한 평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9〉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판정결과 추이

(단위: 개)

	2018	2019	2020	2021	2022
정상추진	147	155	24	69	32
사업방식변경	121	176	132	194	210
감축	96	105	73	181	213
단계적폐지	9	8	12	13	26
즉시폐지	1	4	2	5	20
통폐합	1	1	5	1	2
합계	375	449	248	463	503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각 연도

다음은 각 판정 결과별 세부 점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세부 점수는 보조사업의 효과성 등 13개 지표와 이를 조합한 타당성, 적정성 점수로 구성된다. 세부 항목 중 사회적가치 실행은 2019년부터, 자체사업관리 노력 점수는 2020년부터, 평가결과 이행여부와 실집행 실적 지표를 2021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먼저 타당성 점수의 경우 2019년까지는 70점 만점으로, 2020년부터는 80점 만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정상, 사업방식변경 판정 사업의 타당성 평균 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축, 단계적 폐지 사업의 타당성 점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통폐합과 즉시폐지 사업은 점수 체계 개편 이전보다도 평균점수가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표 III-10〉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타당성 점수 추이

(단위: 점)

	2018	2019	2020	2021	2022
정상추진	61.3	61.6	70.6	70.2	70.6
사업방식변경	54.0	52.0	60.4	62.0	62.9
감축	48.9	48.8	53.1	54.4	53.9
단계적폐지	52.6	48.7	51.8	57.2	46.1
통폐합	57.0	42.0	48.1	58.4	48.3
즉시폐지	45.0	38.3	46.2	39.5	41.8
총합계	55.5	54.4	58.5	59.9	57.8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각 연도

어떠한 항목에서 변화가 컸는지 보조사업 효과성 점수를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은 효과성 점수만으로 2022년에 2018년 대비 5점 가량의 높은 상승을 보였다. 감축 사업마저도 평균점수가 상승했다. 반면 통폐합, 단계적 폐지, 즉시폐지 사업의 평균점수는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즉 보조사업 타당성 점수의 배점 자체는 증가했지만, 정해진 배점 내에서 점수편차는 오히려 더 커졌으며, 특히 효과성 점수가 사업의 판정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낼만큼 크게 편차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평가항목의 목적과 배점구성을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점수를 보면 모든 카테고리에서 2018~2021년 간 평균점수가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미 2018년에도 평균점수의 편차가 1.5점 정도로 크지 않았던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심지어 2021년 통폐합 사업은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이 10점 만점에 9.4점으로 가장 높았다. 즉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표 III-1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점수 추이

(단위: 점)

	2018	2019	2020	2021	2022
정상추진	3.7	2.7	8.6	8.4	8.5
사업방식변경	3.4	2.4	7.9	7.5	7.8
감축	3.1	2.4	7.2	6.9	7.0
단계적폐지	2.7	2.4	6.5	6.8	6.0
즉시폐지	2.8	1.5	7.3	3.8	5.5
통폐합	2.2	2.6	7.4	9.4	6.7
총합계	3.4	2.5	7.7	7.4	7.3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각 연도

다음은 2019년 신설된 사회적가치 점수이다. 이 점수는 전정부에서 신설된 것인 만큼, 2018년 당해 연도에는 정상추진, 사업방식변경 등 비감축/통폐합 판정 사업에 가점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감축사업에 사회적가치 점수가 많이 부여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평가 목적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 사회적 가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점 최대가 3점이므로, 사업 판정 결과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점수항목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사회적가치 실현 점수 추이

(단위: 점)

	2019	2020	2021	2022
정상추진	1.2	1.2	0.5	0.4
사업방식변경	1.0	1.0	0.6	0.4
단계적폐지	1.1	1.5	0.4	0.4
즉시폐지	0.8	0.3	0.2	0.3
통폐합	0.3	0.5	0.2	0.3
감축	0.0	1.6	1.0	0.5
총합계	1.1	1.1	0.5	0.4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각 연도

다음은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항목이다. 이 항목은 2019년까지는 배점 30점으로 운영되었지만, 이후에는 20점으로 배점이 낮아졌다. 보조사업의 타당성점수가 배점이 커지고 편차도 커졌다면, 관리적정성 점수는 배점은 작아졌지만 편차가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은 전체 평균점수가 25.2점, 정상추진 판정 사업의 평균 26.3점, 통폐합 사업 평균점수 25.5점으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 반면 2022년에는 전체 평균 14점, 정상추진 16저무, 통폐합 사업 11점으로 상위 판정 사업그룹과 하위 그룹의 편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의 세부항목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등의 항목을 보면, 각 판정등급 사업 간의 평균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3〉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적절성 점수 추이

(단위: 점)

	2018	2019	2020	2021	2022
정상추진	8.5	8.9	4.4	4.3	4.0
사업방식변경	7.8	8.3	3.9	3.8	3.9
감축	8.2	8.1	4.0	3.6	3.6
단계적폐지	7.9	8.7	4.1	3.6	3.1
즉시폐지	7.0	7.8	2.8	3.8	3.0
통폐합	10.0	7.0	3.8	2.0	3.2
총합계	8.2	8.5	4.0	3.8	3.7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각 연도

보조사업자 선정 적절성 항목이 2018년, 2022년에 걸쳐 각 등급 간의 편차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부정수급 관리 적절성 점수는 0.5~1점 정도의 차이가 꾸준히 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판정등급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4〉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부정수급 관리 적절성 점수 추이

(단위: 점)

	2018	2019	2020	2021	2022
정상추진	8.9	8.7	8.6	8.5	8.3
사업방식변경	8.2	8.2	7.8	7.6	7.7
감축	8.0	8.0	7.7	7.6	7.5
단계적폐지	8.3	7.8	7.6	7.3	6.5
즉시폐지	8.5	9.3	7.0	7.3	6.9
통폐합	8.5	7.0	7.9	5.0	7.8
총합계	8.4	8.3	7.8	7.7	7.5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각 연도

오히려 관리 적절성 항목의 점수는 배점 방식의 점수 항목보다는 가·감점 항목에서 더 큰 편차가 나타났다. 감점은 자체 사업관리 노력, 평가결과 이행여부, 실집행 실적 등 3가지이다. 이 중 자체사업 관리노력은 항목 자체가 관리적절성 항목의 타 배점항목과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가감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이행여부 역시 통폐합 사업에 대해서는 배점인 1점을 모두 감점받았지만, 그 이외의 등급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자체 사업관리 노력 점수 추이

(단위: 점)

	2020	2021	2022
정상추진	0.2	0.0	-0.1
사업방식변경	0.3	-0.3	-0.2
감축	0.2	-0.3	-0.3
단계적폐지	0.0	0.0	0.0
즉시폐지	0.0	-0.4	-0.2
통폐합	0.2	0.0	-0.5
총합계	0.2	-0.2	-0.2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각 연도

〈표 III-16〉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수 추이

(단위: 점)

	2021	2022
정상추진	0.0	0.0
사업방식변경	-0.2	-0.1
감축	-0.3	-0.2
단계적폐지	0.0	-0.2
즉시폐지	0.0	-0.2
통폐합	0.0	-1.0
총합계	-0.2	-0.1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각 연도

이처럼 타 배점항목의 변별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점 만점 중 3점의 감점이 가능한 실집행 항목의 점수 편차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사업의 감점 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 감점 규모는 감축,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등의 순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 점수는 국고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정량적으로 산출되는 지표인 만큼, 이 정량지표가 사업관리 노력 등 정량지표보다 더 큰 비중으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관리적절성 항목 점수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I-1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실집행 감점 점수 추이

(단위: 점)

	2021	2022
정상추진	-0.3	-0.3
사업방식변경	-0.6	-0.4
감축	-1.0	-0.9
단계적폐지	-1.8	-1.3
즉시폐지	-0.2	-0.5
통폐합	0.0	-2.0
총합계	-0.7	-0.6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각 연도

지난 5년간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배점항목을 분석하면 크게 2가지의 흐름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나는 법령, 규정 측면의 타당성의 변별력은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사회적가치 실현, 관리 노력 항목 역시 변별력이 크거나, 커지지는 않았다. 반면 수치로 확인이 가능한 사업의 효과성, 실집행 실적 점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점수와 등급 판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단의 짧은 운영 시간, 소수의 위원에게 많은 사업이 배정되는 현실과 맞물려, 소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정성평가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점수와 수치 형태로 판정이 가능한 부분의 배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의 관리와 전산화, 시스템 관리에도 시사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스템상으로 정성평가의 관리항목과 노력은 수치화하거나, DB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들 정보는 배점보다는, 텍스트로 입력된 보고서 형태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즉 보고서를 저장하고 있는 현행의 시스템 구성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사업 등급 판정에 영향을 주는 효과성 정보, 실집행 실적 등은 수치화하여 저장하기 용이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즉 효과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실집행 실적을 시계열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구성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개선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2개이다. 성과정보는 분산저장되어 있으며,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 먼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가재정법」 등 재정관련 법에서 규정한 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재정성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2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다.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별첨서류인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은 11종의 다양한 평가 결과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이 중에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데이터도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개별 내역사업의 정보와 실집행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 보고서를 탑재하여 대국민 공개로 사용하고 있다.

〈표 III-18〉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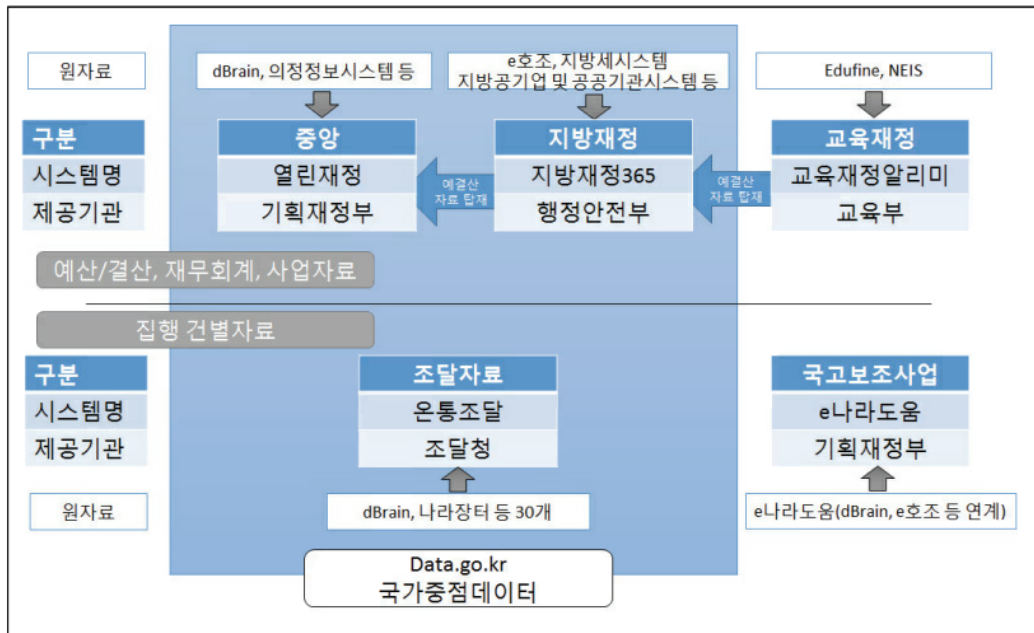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성과정보관리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세부사업관리	가등록사업 관리
	사업관리	실집행 정보 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성과정보관리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3. 보조사업 정보공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재정정보 공개의 현황과, 보조사업 정보공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재정정보 공개 체계는 예/결산 자료와 재무회계 및 사업별 자료 분리, 중앙과 지방의 분리, 사업별 분리(조달/보조) 라는 특징이 있다(박정수, 2018).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체계는 아래 〈그림 III-2〉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과 성과정보 공개 역시 분산되어 공개가 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2016년 처음으로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 구축되었을 때에는 이 사이트에서 중앙정부 세입·세출, 결산, 국고보조금 정보와 맞춤형 재정지원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어 2017년 이나라도움이 개통한 후에는 국고보조사업 관련 재정사업 정보는 대부분 이나라도움 대국민 홈페이지로 이관되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III-2〉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체계



자료: 박정수, 2018.

성과정보와 관련해서는 아래 두 법령이 근거법령이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로, 「국고보조금법」은 보조금 관리정보의 일부로 성과보고서와 보조금연장평가 결과로 보고 있다.

〈표 III-19〉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련 법령 및 조항

법령	근거 조항	내용
국가재정법	제85조의12	기획재정부장은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법	제26조의2	③보조금 통합관리망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 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국가재정법」제85조의6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들 정보는 각기 대국민 정보공개 페이지인 열린재정과 이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형태 또는 시각화 형태로 열람은 불가능하며, 각각의 정보는 아래 <표 III-20>와 같은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표 III-20>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공개현황

홈페이지	구분	내용	형식
열린재정	세부사업 정보	각 사업별로 사업설명서 내용을 조회	PDF
	성과지표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성과지표 조회	PDF
	연장평가	전체 연장평가 보고서를 조회	PDF
이나라도움	내역사업 정보	사업별 정보를 속성에 따라 검색하고 사업 상세정보 조회	선택식 검색
	연장평가	사업별로 분할된 개별 연장평가 보고서를 조회	PDF

자료: 열린재정, 이나라도움 홈페이지.

대부분의 자료가 PDF 즉 텍스트 형식으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동일한 연장평가라고 하더라도 열린재정에서는 전체 보고서를, 이나라도움에서는 사업별로 분할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등,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에서 차이가 있기도 했다. 개별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다보니 이나라도움에는 탑재가 되지 않는 등, 각기 공개하는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4. 국고보조금 성과정보 관리의 한계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변천, 대표적인 성과관리 제도인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관리제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의 주요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비록 업무 수행 과정은 지난하고 형식이 복잡하더라도, 결과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추이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표 III-21〉 비교대상 3국의 보조금 관리제도와 시스템 비교

		미국	영국	대한민국
규모1)	규모1)	8.7조 달러 (총지출 대비 61.7%)	4,164억 파운드 (총지출 대비 39.3%)	102.3조원 (총지출 대비 16.0%)
	법령/ 관리지침	OMB A-11 예산안 편성준비지침 OMB Uniform Guidance on Grants	Gov't Functional Standard: Grants Guidance for Grants Grants Pipeline Control Framework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도	사업목록	Assistance Listing	360giving list	이나라도움 내역사업 목록
	평가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평가 보조사업자성과평가	성과점검, 적정성평가 심층평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조사업성과지표관리
전산 관리	시스템	SAM	CPAR	GGIS
	개요	사업자 등록 및 관리 공모사업등록	공모사업 성과관리	내역사업 등록, 공모사업 관리
	주사용자	사업자/관리자	사업자/관리자	사업자/관리자
	공개	보조사업 목록: SAM.gov/grants.gov 재정정보: USASpending.gov 성과정보: Performance.gov 평가정보: Evaluation.gov	평가정보 및 성과정보: uk.gov 보조사업 목록: 360giving	성과정보 및 평가정보: 열린재정 보조사업 목록 및 평가정보: 이나라도움

주 1) 각국 2023 회계연도 기준

자료: 각국 지침, 공개 홈페이지 자료 기준으로 저자 작성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 등이 있어 아직 성과정보 관리의 최종 효과, 즉 성과관리 정보를 당해 연도 일회성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재정관리의 다양한 영역에 사용 즉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가령,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기본 목적이 사업 추진의 연장여부를 평가하는데 있고, 세부적으로는 사업 방식 개선을 통한 효과성 향상, 지출 구조조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관점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사업의 효과성 점수, 실행점수가 판정 결과에 유의미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관리의 여타 업무, 예를 들면 신규사업의 심사와 유사 중복 검증, 기금 평가 등 타평가에의 활용 등에 이르려면 사업 타당성 및 집행노력 등 법률·규정과 정성평가 내용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와 정보들이, 각 재정관리 업무의 국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다.

종합하면, 그간의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의 제도 개선 연혁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이 제도들이 성과관리라는 재정운용의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간의 제도 개선은 주로 자율과 책임 증진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후 관리 측면에서의 관리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사후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 효과성 지표, 실행점수와 중복·부정수급 관리를 중심으로 한 관리 적절성 지표가 중요시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관리, 연장평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관리된 데이터들이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그나마 관리되는 데이터들도 성과지표 관리와 연장평가 이외의 업무에 사용이 제한적이고, 타업무 활용에 대한 절차와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법률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라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방향 제시는 있지만 실제로 그간 저장된 각종 성과정보들이 데이터기반 행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차원에서 활용이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관리, 데이터의 활용 모두가 체계적으로 절차화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데이터들이 결합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파편화되어 개별 단위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편이다. 매

년 반복되는 연장평가이기는 하지만, 그 연장평가 과정에 사용되는 정보는 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가? 전년도 평가결과를 이듬해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에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답을 해줄 수는 없다. 물론 만만치 않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장애물도 많은 편이다. 재정사업 시계열 관리는 정권 교체에 따른 업무 조정 및 정부조직개편,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업 및 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상시 발생하기 때문에, 세부사업 단위에서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기란 대단히 어려웠다.

단순히 이 두 시스템의 여러 단위기능에 흩어져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정보를 한 군데로 모아서 보여주는 것도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 정보가 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 정보는 별도의 수치나 점수가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dBrain+에 저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dBrain+는 개별 사업의 연장평가 결과 점수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고, 평가 보고서는 별도로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성 평가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기 어렵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경우에도 효과성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성과지표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인 성과지표, 실집행 정보는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추출 과정을 거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dBrain+에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된 정보를 모두 탑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 업무시스템은, 수행하는 업무를 위주로 구성되어야 하지, 시스템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위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위시스템의 기능을 좀더 충실하게 살려,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신규사업 심사는 이후 사업가등락으로 연결되는데, 신규보조사업 심사를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속성정보를 그때그때 추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재정성과관리의 틀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사업 심사에 있어서 dBrain+ 데이터 사용 절차, 관련 자료의 저장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신규사업 심사가 사업가등락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정보를 한군데 집적,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심사와 등

록,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성과관리 등 타 단위기능과의 업무 기능 조정이 우선이고, 조정된 절차에 따라 데이터 추출 및 사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의 과년도 평가자료, 실집행 자료, 성과지표 활용, 신규사업 심사 시 유사 중복 체크와 향후 성과를 미리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과거 속성 정보 활용, 재정성과관리의 국고보조사업 지표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세부사업 성과지표 공동활용 등이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각 단위업무 간의 공동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 관리 및 추출 절차를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데이터의 융통 활용이 증진되어야 정확성 등을 확보하여 대국민 공개에 이어질 수 있다.

IV.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방향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관리는 지난 20여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간 중복 제거, 세출 구조조정, 실집행 제고와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에 이바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가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화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거기반 행정, 데이터기반 행정을 강화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충실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운영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새롭게 축적되는 데이터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중복성 심사, 사업별 과거 실적치를 토대로 한 평가, 타부처와의 공동활용을 통한 데이터 효용 증진, 지표 공동활용을 통한 성과 중심의 대국민 정보 전달 등에 이바지할 것이다.

즉 그간의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의 개선의 효과를 분석하고,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화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과중심 재정 운용에 이바지하여, 재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정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으로 국고보조사업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업무 절차 확립, 데이터베이스 개선, 활용 개선, 공개 확대 등 4가지를 방안으로 제시한다.

1.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업무절차 확립

현재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는 2개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지표 관리는 dBrain+,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관리는 이나라도움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신규사업 심사를 위한 데이터 관리와 활용 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편이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성과 분석을 위해 dBrain+를 통해 관리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으며, 실집행 분석을 위해서 이나라도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추출한 수치를 수기로 활용하고 별도로 저장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대표 지표만 보아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분석에서 보듯,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는 사업 효과성 점수와 실집행 감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즉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라는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 2가지 점수를 저장,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위한 데이터 추출 절차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못한 점도 한 가지 원인이다. 평가를 함에 있어 표준화된 정보를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침화한다면, 해당 데이터 역시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신규사업 심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행 사업과의 내용 중복 여부, 유사한 사업 및 사업 수행 주체의 과거 사업수행 실적 등이 신규사업 심사에 앞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다. 시스템에 저장된 과거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규사업 심사에 있어 전문가의 정성평가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신규 사업 심사에 있어 정성평가 비중을 낮추려면, 시스템 기반 데이터로 1차로 신규사업 신청을 스크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나라도움, dBrain+ 등에 탑재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근거와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여기서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신규사업 심사 등의 업무에 dBrain+와 이나라도움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두 시스템에 탑재된 데이터를 결합하고 보완한 국고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용처는 단순히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신규사업 심사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재정성과관리와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국가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동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dBrain+에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의 하위 데이터베이스로써 국고보조금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의 국고보조사업 데이터 관리항목을 확장, 일부 항목을 이나라도움을 통해 연계보충하도록 하고 그 근거를 신규 지침이나 현행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지침”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후 신규사업 심사, 연장평가 근거자료 관리 등의 데이터 추출절차와 관리절차를 확립하여 사용하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재정관리 효율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데이터베이스 개선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제도적 활용을 결정하고 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확장, 관리할지에 대한 것이다.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은 현재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를 등급에 한해서만 사업담당자가 수기로 업로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타 부처 평가, 재정당국 평가 등 다양한 평가 정보를 관리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추가 속성 입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이 구축된 상태다. 단순 평가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사업의 평가 제외 코드와 사유, 평가 주기 등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보다는 국고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표를 설정하는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제, 마찬가지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해 설정하는 속성정보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 외에도, dBrain+내에는 국고보조사업의 정보를 포함하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 데이터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제외 코드와 사유 등은 입력을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로 입력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필요하다.

즉 데이터베이스는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정보, 성과지표, 사업별 속성정보, 평가주기, 평가제외 코드와 사유를 모든 사업에 대해 구비하고, 평가 주기에 따라 평가정보가 입력되며, 매년 실집행 정보가 이나라도움을 통해 업데이트 되는 것을 기본 구조로 가지게 될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각 부처별 담당자는 국고보조사업 담당자라기보다는 성과담당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의 입력 절차, 재정당국의 확인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연계주기, 입력 주기 등은 신규사업 심사, 연장평가 심사 등이 수행되는 절차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매년 데이터 정확성과 완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초기에는 활용이 약간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3.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의 활용과 공개 확대

재정사업 성과지표 관리, 신규사업의 심사, 연장평가 결과의 관리는 단순히 재정당국만의 업무는 아니다. 개별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지표는 단순히 자율평가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제출, 대국민 자료 생성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재정당국에 신청하기 전에, 신규사업의 심사를 준비하거나 각 부처 수준의 자율적인 검토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당국 외에 다양한 재정사업 성과평가 프로세스가 있다. 이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일 수도 있다.

현재는 개별 부처의 성과 업무, 다부처 사업의 평가업무에 사용되거나, 결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개별적으로 관리되거나, 수기로 관리되어 공동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물론 모든 평가 정보는 재정당국 예산실로 제출되어 편성 과정에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그 이외에 모든 평가정보를 바탕으로 종합판단을 하는 공식 프로세스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부처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사업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하기 지방/민간, 자본/경상으로만 나누어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다부처 사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으므로, 그 평가 역시 일자리, 재난안전, 중소기업 등 정책사업군별로 평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모든 평가 업무 데이터를 갖춘 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메타평가 개념으로 타 평가 결과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본 연구범위의 밖이므로 논의의 범위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해서도 전체 외부평가 결과를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데이터 기반 평가가 더 개선될 수는 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전 부처 활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과제이다. 현행 재정당국 평가만 보더라도, 기금평가, 심층평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각 부처의 사업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불분명하다. 평가의 영향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평가결과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이 개별 부처에서 얼마나 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 후, 개별 부처의 평가담당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추가 보강하여 각 부처의 데이터기반 평가, 성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입력, 관리, 정합성 유지를 위해 데이터가 모이는 시점에 데이터 검증을 위한 외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평가담당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연계데이터 수신 후, 보고서 평가 결과표를 바탕으로, 제3자가 위탁하여 이를 검증을 하는 것이다. 데이터 입력을 검증 시점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시스템 관리자와 데이터 입력자가 모든 오류 검증 부담을 가지는 것보다는 수월한 해결책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체계가 옳은지, 담당자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성과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한 외부 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은 dBrain+ 차세대 구축과정에서 개선된 바 있다. 성과 중심의 국고보조사업 데이터가 완비되고, 내부 의사결정에 활용이 되고 난 후에는, 재정 투명성 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에서 검토해보았듯이,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정보, 성과정보는 내부 의사결정에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 미국은 재정투명성법(FFATA), DATA Act, 증거기반정책법 등을 통해 의사결정에서의 데이터 활용, 표준화와 아울러 평가 결과의 공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도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바로 공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데이터의 입력과 검증, 정합성 및 정밀성 등 품질 확보, 활용 가치 확인 등은 3~4년 이상 중기 시계에서 필요한 사안이다. 물론, 이미 3~4년이 지났다면 그 시점에 새로운 성과정보가 생성되거나, 제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 변화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가치와 공개의 의미를 희석시키지는 않는다. 데이터 관리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은 경이롭지만, 데이터 관리, 활용과 공개는 기술의 발전보다는 보수적인 관점

을 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정해진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공개와 활용 시점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정보가 국민에게 공개가 된다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에서 나아가 정부가 하는 일을 성과 중심으로 국민에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될 것이다. 물론 이후에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 요구는 꾸준히 제기될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의 방식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져야 하는 특징이자 장점은 지속성과 유연성이다. 새로운 데이터의 추가, 기존 데이터의 변경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입력-관리 방식이 규정되어야, 미래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해나갈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정보 관리를 둘러싼 국내외 현황과 우리나라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국고보조사업의 양적 팽창, 관리 확대 및 제도개선은 재정이라는 정책수단을 가진 나라라면 불문 없이 추진되는 것인바, 그만큼 현대 재정에서 보조금의 비중과 위상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 행정국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헌법에 규정된 강제력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 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절차를 필수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와 성과중심 재정운용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으며, 성과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성과 지향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관리 효율화, 정보공개 방식 개선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재정의 양적 팽창,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공개, 그리고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각각이 하나씩 분리된 것이 아니며, 선후관계도 아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양적으로 팽창한 정부재정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부재정의 도달범위를 넓혀주기도 한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3개의 축은 정부 관리기술 발전과 행정개혁의 핵심 요소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은 양적, 질적으로 그리고 관리 기법상으로도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 시점에서 외국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의 새로운 것, 발전된 것을 참고하여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외국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문제, 즉 기존의 것을 꾸준히 발전시켜나가면서, 미진한 부분을 분석해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간 양적팽창에도 세출 구조조정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가, 여전히 성과 중심으로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업무 전산화에 있어 누락된 부분은 없었는가 등은 가의성(redundancy) 문제가 행정업무 개선에 얼마나 중요한 척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질문들이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보조금 사업관리와 관련된 수십 개의 시스템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을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증거기반 정책관리라는 새로운 사업관리 영역이 만들어졌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016년 보조금관리 통합시스템을 개통하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상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개혁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다. 그동안은 전산 시스템과 정보통신 기술 이용이 주로 제도개선에 후행하는 것으로만 인식했다면, 최근에는 축적된 정보의 활용, 개선 및 확대가 하나의 테마가 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도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이 2017년 개통했으며, 국가재정관리시스템인 dBrain은 2013년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개통을 거쳐 2017년 재정사업 성과지표 데이터베이스 오픈, 2020~2022년 차 세대를 거쳐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생산, 축적되고 있다. 이들 정보를 재정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성과지향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다시 한번 데이터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축적된 정보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고 용이하게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업무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개선이다.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활용성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보강을 통해 활용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후 전 부처 재정관리 업무로 활용을 확대한다. 첫 단계가 주로 재정당국의 재정 성과정보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단계에서는 전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정보관리 차원에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활용을 확산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황, 국내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재정관리의 영역에는 국고보조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있다. 투자사업, 민간투자, 일자리 사업, 출연사업, 융자사업 등 다양한 전달체계 속에서, 새로운 성과 정보는 매년 생산되고, 저장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외에도, 이들 다양한 전달체계의 사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입력 및 활용의 애로사항, 개선사항은 없는지 꾸준히 청취하면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U.S. Office of Mgmt and Budget. (2019). Phase 1 Implementation of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ct of 2018: Learning Agendas, Personnel, and Planning Guidance.
- U.S. Office of Mgmt and Budget. (2020). Phase 4 Implementation of 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ct of 2018: Program Evaluation Standards and Practices.
- U.S. Office of Mgmt and Budget. (2021). Evidence-Based Policymaking: Learning Agendas and Annual Evaluation Plans.
- U.S. Office of Mgmt and Budget. (2023). Building and Using Evidence to Improve Government Effectiveness, Chapter 12,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4.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3). FY 24 Annual Evaluation Plan.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3). FY 24 Strategic Plan.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1). FY 2022-2026 Learning Agenda.
- Federal News Network. (2021.9.1.) OMB launches Evaluation.gov as hub to showcase work form chief evaluation officers.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2). Federal Contracting: Effort to Consolidate Government-wide Acquisition Data Systems Should Be Reassessed.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9). DATA Act: Quality of Data Submissions Has Improved but Further Action Is Needed to Disclosure Known Data Limitations.
-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22). Federal Spending Transparency: Opportunities Exist to Further Improve the Information Available on USAspending.gov.
- U.S. Department of Treasury. (2021). DATA Act Information Model Schema(DAIMS) Overview.
- Presidential Agenda Archives. georgebush-whitehouse.archives.gov.
-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Integrated Award Environment(IAE)

Systems Information Kit. gsa.gov.
Contractor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ing System. CPARS.gov.

기획재정부. (2018).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보고서.

_____. (2019).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보고서.

_____. (2020).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보고서.

_____. (2021).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보고서.

_____. (2022).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2018). 국가결산 성과보고서.

_____. (2019). 국가결산 성과보고서.

_____. (2020). 국가결산 성과보고서.

_____. (2021). 국가결산 성과보고서.

_____. (2022). 국가결산 성과보고서.

박정수. 2019. 우리나라 재정정보공개 제도 시스템 개선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
정보분석 20-03.

_____. (2020),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보
고서.

_____. (2022), 재정성과정보 분석 및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보고
서.

심혜인(2020), 국고보조금 데이터 정보공개 및 활용 대안, 한국 재정정보원 연구보고
서.

이원희 외 (2005), 국고보조금 운영의 개선방안.

권오성(2016).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행정연구원

이삼주, 윤태섭(2016).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법률정보시스템.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

발행연월 2023년 12월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편집 재정정보분석센터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인쇄처 경성문화사

I S B N 979-11-91094-32-9

